

**여연 정책자료집**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완 방향**

**2009. 3.**



**여익도연구소**



여연 정책자료집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완 방향

2009. 3.



여익도연구소

## <참여 연구진>

- 연구 참여인력 : 총30명
- 연구 총괄 : 곽창규(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연구책임자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연구 간사 : 주용학(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 설문 조사기관 : MOBILICUS (Research & Consulting)  
(담당 : 김장수 객원연구위원/여의도연구소)
- 정책토론회 발표자 : 배규한(국민대 사회학과)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부)
- 정책토론회 토론참여자 : 박효중(서울대 교수)  
유일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언오(삼성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
- 분야별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 : 총21명  
(국책연구기관 12명, 대학교수 9명)  
강석훈(성신여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 영(한양대), 이일용(중앙대학교), 이현출(국회입법조사처),  
전재성(서울대), 정기오(한국교원대학교), 최무현(상지대학교),  
최영중(가톨릭대), 홍종호(한양대), 한 준(연세대) 외 9명

<이상 가나다순>

본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소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
| <b>&lt;요약문&gt;</b>                           | 1   |
| <b>I. 이명박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의 의의</b>              | 19  |
| 1.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의의                             |     |
| 2. 국정과제 1년 평가의 목적                            |     |
| <b>II. 국가비전과 국정전반에 대한 평가</b>                 | 27  |
| 1. 좋은 비전의 평가기준                               |     |
| 2.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     |
| 3. 최근 20년 한국의 국가비전                           |     |
| 4.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 평가                       |     |
| <b>III.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b> | 43  |
| 1. “인재대국”을 위한 4대 국정전략, 20대 국정과제 평가           |     |
| 2. 국정비전과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과제                      |     |
| <b>I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경제 및 복지 분야</b>    | 75  |
| 1. 정권출범 전후 환경변화와 정책기조                        |     |
| 2.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
|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                       |     |
|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
| <b>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정부 및 외교안보 분야</b>   | 129 |
| 1. 이명박 정부 1년 국정평가: 정부 부문                     |     |
| 2. 이명박 정부 1년 국정평가: 외교안보 부문                   |     |
| 3. 정부 및 외교안보 분야 향후 과제와 제안                    |     |
| <b>VI. 맺음말</b>                               | 163 |
| <b>&lt;참고문헌&gt;</b>                          | 171 |
| <b>&lt;첨부자료&gt; 전문가 평가 결과</b>                | 175 |



목차





## <요 약 문>

### 1. 이명박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의 의의

#### 1)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의의

##### ○ 국가발전 과제의 재정립 필요

- 지난 10년에 걸친 진보주의 세력의 집권은 미래지향적인 국가과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남북관계의 형식적 개선'과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집권 세력의 목표에 사로잡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함.

- 반면,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핵심 국가과제로 재정립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주권확립 → 산업화 → 민주화 → 국제화 → 선진화'로 이어지는 국가과제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주축세력

##### ○ 정책 지향적인 집권 세력과 국가경쟁력 제고

-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곧 효율적이고 신뢰 높은 정책의 완비를 통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제고하는 것임.
- '국가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효율적인 정부'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끊임없는 정책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음.

## ○ '상생 발전'의 사회 시스템 정착 계기

-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일깨워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세력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사회전체의 '상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임.

## 2) 국정과제 1년 평가의 목적

### ○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정 드라이브의 필요성

- '실용주의'를 내세워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반정부 진보세력과 전대미문의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외교, 남북 관계, 사회통합 등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실용주의'가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권2년차인 2009년은 정권의 정체성 차원에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 ○ 정책 재조정 통한 국정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 집권 1년간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국정과제 반발에 따른 촛불집회,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등)로 인해, 집권초기에 설정하였던 국정과제들을 재점검하고 정책 재조정의 필요성 제기
-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 국정운영의 전문성 향상은 행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국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가능

※ 정책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생태계'와 같아서 '민심수용 → 정책입안 → 정책시행 →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작용이 발생하기 마련. 따라서 생태계적 순환작용이 잘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을 위한 정확한 피드백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 정부의 정책 추진과 '소통'의 중요성

-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국정운영과 관련,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
-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의 강제성보다는 해당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
- 초기 국정과제 평가를 통한 소통의 통로 확보는 집권 세력 스스로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2009년 국정과제 보완은 향후 국민과의 소통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

## 2. 국정과제별 평가와 향후 과제

### 1)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 각 국정전략과 과제<sup>1)</sup>에 대한 정책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일반국민들의 인식'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음

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4대 국정전략은 다음과 같음.

[국정전략 13]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국정전략 14] 교육복지 확대

[국정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 양성

[국정전략 16] 미래를 이끄는 과학기술 발전

\* 각 국정전략에는 5개씩의 국정과제가 있는데, [국정전략 13]과 [국정전략 14]에 속하는 국정과제들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이며, [국정전략 15]는 대학교육, [국정전략 16]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내용들임.

- 전문가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정량평가는 A(아주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F(아주 미흡) 5개 등급으로 이루어졌음.
- 일반국민들의 인식은“아주 잘하는 편”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아주 잘못하는 편” 등의 보기들 중에서 응답자들이 “아주 잘하는 편” 또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나타내었음.
  - 일반 국민들은 5대 국정지표<sup>2)</sup> 중 “인재대국”을 정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음.
-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인재대국”을 “능동적 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함.
  -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문에 59.8%가 바람직한 편이라고 응답함.
  - 그러나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책기조와 맞는 방향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6.7%만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인재대국’의 국정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교육 분야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임.
  - 일반인들은 막연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엘리트 교육에 치중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편임.

---

2)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가들은 정책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함.

□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R&D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

-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기획조정을 담당하던 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주관부처 개념 약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미흡,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의 재조정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

- 이러한 우려는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

- 민간주도의 과학기술혁신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주요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

-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혁신의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얻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그 구성이나 역량 및 운영전략 미흡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지적, 현재까지 주로 국가 과학기술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 국가 R&D 예산 배분 방향 및 투자 전략 설정, 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주요 과학기술진흥시책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과학기술 관련 주요 부처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범(汎)부처 종합 조정기능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

○ 녹색기술은 글로벌 환경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기술혁신 패러다임과 경쟁력의 원천을 결합한 변화의 원동력임을 고려할 때 현재 당위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수준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과 녹색성장 기술 개발은 5대 국정지표에 포함된 '활기찬 시장경제'와 '인재대국'의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인프라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개척, 청정에너지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에도 필수적인 과제

- 현재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에서 경쟁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융합기술'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 중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정비전과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은 올바른 방향. 정보화, 글로벌화, 다원화, 네트워킹 등과 같은 미래 사회변동 추세에 잘 부응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월성과 평등성 간의 조화가 요구됨.

**② 교원평가제 조기 시행**

미래지향적 교육의 선결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변화에 있음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숙지 필요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

교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념과 설득력을 갖춘 인재들을 정책결정 및 집행부서에 배치, 정책추진세력 형성 필요

**④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 강화**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은 학교자율에서 시작됨. 특히, 대학 자율화 정책은 그 성격상 행정적 차원의 조치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법적 지위와 자율화 사항을 명시한 '법률'과 자율화 체제를 끌고 갈 '제도'(institution)를 갖추어야함.

**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재점화 될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함.

**⑥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상근 전문 위원제 도입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⑦ 녹색기술**

녹색기술은 글로벌 환경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기술혁신 패러다임과 경쟁력의 원천을 매우 효과적으로 결합한 변화의 원동력이므로 경제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함.

## 2) 경제성장 및 복지 정책

### □ 정권출범 전후 환경변화와 정책기조

○ 역대 정권1년차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권 1년차의 경우에만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다른 정부는 취임 1년 후 모두 성장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주가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정권취임 1년 후 모두 상승
- 물가상승률은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취임 1년 후 모두 상승, 환율이 비교적 낮았던 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대부분 새 정부 출범 후 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해외자금의 유출과 함께 1달러당 1,000원 미만이었던 환율이 1,300원대로 크게 상승
-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절대금액 및 GDP대비 비중 측면에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30%가 넘었으나 과거정부와는 달리 출범 1년간 국가채무수준을 안정화시켰음.

○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 표방, 시장자유주의 정책 실시

- 노무현 정부의 분배 우선과는 달리 성장에 비중을 두어,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활성화로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이루고자함.
- 인수위 시절부터 감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정권



출범 후 법인세 부담 완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은 촛불정국과 유가급등과 같은 대내외 불리한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과 환율 폭등의 혼란을 겪음으로써 혹독한 시련 경험

- 더구나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실물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기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중차대한 과제

## ○ 국정과제 21~40 : 활기찬 시장경제

- 전반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의 기대와 비교하여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지만 세계경기 악화라는 거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

-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로는 '감세' '중앙-지방 상생 성장' '금융규제 완화' '신산업 개척'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사문화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산업과 인프라구축' 등의 과제는 부정적인 평가

- 2009년 주요 과제로는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반드시 지출 확대의 원칙을 세우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지속 추진.  
'한국형 뉴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수요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내용 반드시 포함
- 또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적 완결성 필요

### ○ 국정과제 41~60 : 능동적 복지

- 복지 분야와 관련한 국정운영은 이명박 정부의 상대적인 보수성, 그리고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조건 속에서도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성장'과 '상생'은 공존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평가와 관련, '연금체계' 및 '의료서비스' 개선, '복지서비스' 구축,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은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소득 개선'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 문제 개선'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2009년 이후의 향후 과제와 관련,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국가, 기업, 개인의 상호의존적 역할분담 필요.  
또한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welfare)에서 소외탈출의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workfare)로 탈바꿈 필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이명박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배제한다는 비판 경계
- 복지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의

비용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경기침체가 악화될 경우 특단의 대책으로 세금환급(tax rebate)과 쿠폰제(coupon) 도입 검토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

- 향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우선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시행
  - 첫째,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 구축
  - 둘째, 단기-중기-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구성
  - 셋째,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정책조합들 검토 노력 필요. 즉, 감세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정책조합 마련
  - 넷째,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단호함 필요
  - 다섯째, 시행된 정책들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일관성 유지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중요
  - 첫째,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 둘째,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 필요

- 셋째,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 넷째, 복지재정 확충 (방안)
  - 기존 복지예산 중 낭비적 요인 재점검을 통한 재원 확충
  - 세출구조의 개선(기존예산 중 감소 가능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을 통한 재원 확충
  - 복지관련 제도 정비(조세제도와 교육제도 개선 등)를 통한 재원 확충
  - 유사한 기능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복지확충의 시너지 효과 발휘
- 다섯째,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 3) 정부 및 외교안보 정책

#### □ 공공기관 부문

- 2009년 향후 과제로 지적된 정부조직 개편방향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 전개 필요. 분권화의 경우 지방정부 스스로에 의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또한 공공부문평가제도 개선 및 감사업무 개선과 관련,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
-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무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평가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임. 향후 이와 관련한 준비가 요구됨.
-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향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  
권한 강화에 대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평가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이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적 효율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광역 경제권 발전위원회'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추가조치 필요.

○ 2009년 이후 종부세의 수정, 분권교부세의 기한만료 등으로  
지방재정체계 전반의 개편방안 마련 필요

- 이와 관련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 법질서 확립, 사회적 인프라 구축 부문

○ 2009년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활성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검찰관직 개방 등 검찰  
시스템 개선, 공정한 가석방 제도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징금납부 강제제도 도입 등의 이슈 부각 예정

○ 부패척결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 필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규정 필요. 정부투명성 평가의 경우 세부과제  
보다 구체화 필요

○ 향후 부패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1)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기준 강화, 2)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방안, 3)로비스트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제정 법률안의 검토, 4)청렴도 측정의 합리적 대안 모색, 5)정책 투명성 평가의 시범적용 확대 등

- 2009년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수입품이나 쇠고기 부산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 아동(영유아 및 초등, 중등학교 급식)들에 대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적 안정성 문제도 사회적 이슈 예상
- 2009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안전한 일터 조성은 악화될 가능성. 안전한 일터의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협력방안 정립, 이를 위한 민간 자체계획 수립 필요

#### □ 외교안보 부문 : 북핵, 한미관계, 글로벌 기여 외교 부문

- 다른 국정과제와 비교하여 세부 과제별로 평가내용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미동맹 강화 및 새로운 주변국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을 반영하여 북한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2008년 국정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 모두,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후순위로 뒤쳐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에 대해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2009년 이후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정체성은 가변성을 가지므로 오바마 행정부 등장에 따른 정책변화에 전략적인 대응 자세 필요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바마 정부 출현으로 미국의 정책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아젠다를 전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
  - 또한 한미 관계와 관련,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오바마 정부이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 오바마 정부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남북관계와 관련, 향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북핵 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북핵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도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적극 보여주는 전략적인 자세 필요
  - 현재의 남북한 관계 경색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적어도 2010년 상반기까지는 대북한 원칙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진보세력의 정치적 압력이 예상되지만 북한이 2008년 하반기부터 초강경 대남정책 전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로 작용
  - 또한,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전략(장거리미사일

실험, 서해 NLL 침범 등)을 구사하더라도 이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으로 돌리기에는 한계

※ 과거 ‘햇볕정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북한은 ‘핵무기 실험’과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한 바 있음.

- 이외 ODA 외교, PKO 파병, 인권외교, 각종 국제사회 기여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일관된 입장유지가 중요. 또한, 우리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정책 병행 필요
- 한미 FTA의 경우, 2009년을 넘어서면서 미국 내 경제상황과 관련한 여론이 워낙 부정적인 상황이므로 전략적으로 다소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



# I. 이명박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의 의의



# I. 이명박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의 의의

## 1.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의의

### 가. 국가발전 과제의 재정립

- 대한민국은 근대 국제체제로의 편입이 뒤늦었고 짧은 현대국가의 역사와 남북한 분단이라는 열악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10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음은 물론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경험하였음.
-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경제성장 사례가 되었음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견줄 수 없는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이룩하였음.
- 이로써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주권확립의 국가과제’ → ‘산업화의 국가과제’ → ‘민주화의 국가과제’ → ‘국제화의 국가과제’를 순차적으로 넘어선 매우 성공적인 국가발전 경로를 경험하였음.
- 개별 국가정체성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교적 짧은 현대 국가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음.
-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이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 40여년이 되어가고, 1987년 우리사회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한 지 십 수 년의 세월이 흘렀음.
- 지난 10년에 걸친 진보주의 세력의 집권 역시 나름대로 공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발전 과제를 재정립하고 ‘산업화-민주화-국제화’를 힘겹게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미래지향적인 국가과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남북관계의

형식적 개선'과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집권세력의 목표에 사로잡혀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핵심 국가과제로 재정립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정부 수립 이후 '주권확립 → 산업화 → 민주화 → 국제화 → 선진화'로 이어지는 국가과제의 연결을 가능케 한 데에 그 핵심적인 의의가 있음.
- 특히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에 오른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험한 국가성장 궤적을 분석해 보면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화와 국제화를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저마다의 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른 '선진화'를 다음 국가 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나. 정책 지향적인 집권 세력과 국가경쟁력 제고

- 이명박 정부는 48.7%의 대선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에 성공하였음. 전임 정권들과 비교하여 '비정치권' 출신의 대통령이며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 확보가 선거에서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음.
- 이러한 정황들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의의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정책 지향적인' 정체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의의는 한국 사회의 '선진화'라는 핵심 국가과제 재정립에 있으므로 집권의 정당성은 필연적으로 '정책 지향성'에 있다는 의미를 가짐.
- 주지하는바 오늘날은 글로벌화가 보편화된 시대로서 이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확립이 국가발전의 생명이고,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고효율적이고 신뢰 높은 정책의 완비를 통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제고하는 것임.
- 따라서 정책 지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음. 특히 평가기관에 따라 다

소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효율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권 차원의 실천 목표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의의는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 상생(相生)의 사회 시스템

-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의 ‘상생 발전’의 기회를 앞당겨 경제·사회적으로 ‘상생 시스템’을 정착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한 그 의의가 있음. 안타깝게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의 특정 세력만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는 논쟁이 있었던 바, 사실 관계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정권 출범 이후의 정책을 보고서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함.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의 기본적인 의의는 최근 수년간 잠자고 있던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을 일깨워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세력이 서로 상생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함에 있음.
- 경제주체간 서로 성장을 북돋우는 시스템이 없이는 국가 전체의 총합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성장’은 ‘상생’과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음.
- 경제주체간의 성장 격차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이 라면 적극적인 ‘상생’의 개념은 부유한 계층에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의 일방적인 소득 이전이 아니라 양자간 성장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하자는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사회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임.

## 2. 국정과제 1년 평가의 목적

### 가. '실용주의' 기반으로 한 국정 드라이브의 필요성

-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과거 선거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집권세력이고, 또한 그러한 지지를 토대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자 하였지만 2008년은 기대와 달리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였으며, '국제경제 환경' 또한 최악의 상태로 다다르면서 국정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었음.
- '실용주의'를 내세워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경제, 외교, 남북한 관계, 사회통합 등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실용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한 때 대통령 지지도가 10%대에 떨어지기도 하였고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우리경제를 강타하면서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었음.
- 하지만, 2008년의 이러한 어려움이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국정운영 스타일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생겨남.
- 시간적으로도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가 30%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진화'의 국가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평가의 목적은 '경제 회복' '남북한 관계 정상화' '사회통합' '소외계층 포용' 등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1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09년 이후 국정운영에 주어진 과제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있음.
- 특히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임으로 2009년이야말로 정권의 정체성 차원에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됨.

## 나. 정책 재조정 통한 국정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 ‘좋은 음식의 경우 좋은 재료가 7할’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정책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의 투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음.
- 집권 초기에 설정하였던 국정과제들을 점검함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됨. 이와 같은 국정 운영의 전문성 향상은 행정부의 정책 전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국정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이어지게 됨.
- 정책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생태계’와 같아서 ‘민심수용 → 정책입안 → 정책시행 →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임. 따라서 생태계적 순환작용이 잘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을 위한 정확한 피드백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배경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초기에 설정된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일은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줌.

## 다. 정부 정책 추진과 ‘소통’의 중요성

-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 부재’였음.
- 정보혁명의 결과 국민은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사교환’의 파트너가 되었음. 정책영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의 강제성보다는 해당정책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음.
- 정책결정자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혹은 부족할 때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차원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자산임.

-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국민들은 ‘이념 지향성’이 강하고 그 결과 특정 사안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보다는 논의의 초점이 ‘민주주의’ ‘자유’ ‘통합’ ‘정의’ 등과 같은 상징적인 담론으로 쉽게 옮겨가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개별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2009년은 가능한 한 2008년 집권 1년차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 설정한 국정과제의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소통의 노력과 의지는 자발적일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됨. 초기 국정과제 평가를 통한 소통의 통로 확보는 집권 세력 스스로가 열린 자세 필요. 2009년 국정과제 보안은 향후 국민과의 소통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1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되 연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및 향후과제 제안을 진행하고자 한다.



## Ⅱ. 국가 비전과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 Ⅱ. 국가 비전과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 1. 비전의 중요성

- 비전이란 어느 한 국가나 집단이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
- 비전의 목적은 구성원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음.
- 비전은 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을 제공해 줌.
- 비전은 확정되지 않은,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려내는 것이므로, 어떤 비전이 성공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함.
- ① 비전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리더의 철학과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함. 비전에는 리더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며, 비전은 리더 자신의 것으로 신념화되어야함. 새로운 비전은 리더의 확신과 숭선수범을 통해서만 국민적 공감을 얻고 널리 확산될 수 있음.
- ②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적 설득력을 지녀야함. 비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간결한 상징성과 전달력을 갖추어야함. 어떤 추상적 구호나 하향식 접근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움.
- ③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좋은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호응이 없다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비전의 형성 및 확산의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④ 좋은 비전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어야함. 예컨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시된 비전들은 대부분 경제나 물질과 같은 하부구조를 강조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가치지향적인 상부구조를 부각시켜야함.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에도 주목해야함.

□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비전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함.

① 국가, 민족 등의 추상적 거대담론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담론이 되어야함.

② 최고 수사를 동원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야함.

③ 각 분야 모든 내용을 담으려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내용만 포함해야함.

④ 개인의 삶과 국가발전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제적 역동성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해야함.

⑤ 그 동안 살아온 리더의 삶이나 언행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 2.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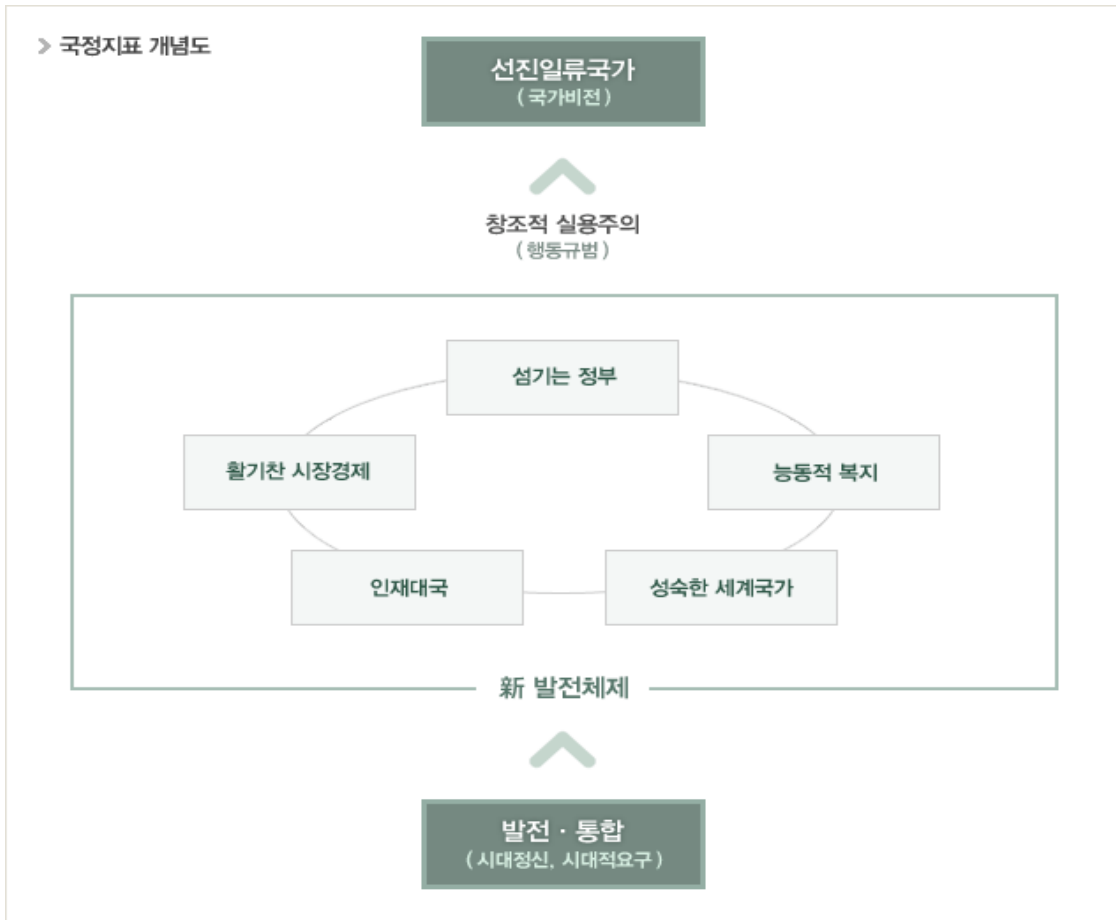
○ 행동규범(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 국정목표 : 신 발전 체제 구축(산업화 발전 체제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체제 지향)

□ 5대 국정지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그림 2-1 참조)

- 각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20개씩의 국정과제가 있으며, 그 아래에 949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있음(표 2-1 참조).
- 각 세부실천과제에는 주관기관 및 추진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표 2-2 참조).

<그림 2-1>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지표



<표 2-1> 국정지표별 세부 추진과제

|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능동적 복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 합계  |
|--------|----------|--------|------|----------|-----|
| 232    | 316      | 155    | 74   | 172      | 949 |

<표 2-2> 세부실천과제 주관기관 및 추진시기

| 번호         | 추진기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 1          | 기획재정부   | 16         | 1          | 2         | 0         | 10         | 29         |
| 2          | 교육과학기술부 | 12         | 31         | 10        | 3         | 26         | 82         |
| 3          | 외교통상부   | 13         | 6          | 1         | 1         | 44         | 65         |
| 4          | 통일부     | 0          | 0          | 0         | 0         | 7          | 7          |
| 5          | 법무부     | 12         | 3          | 1         | 0         | 12         | 28         |
| 6          | 국방부     | 8          | 5          | 0         | 1         | 18         | 32         |
| 7          | 행정안전부   | 19         | 11         | 5         | 1         | 24         | 60         |
| 8          | 문화체육관광부 | 12         | 3          | 1         | 0         | 37         | 53         |
| 9          | 농림수산식품부 | 6          | 10         | 3         | 1         | 18         | 38         |
| 10         | 지식경제부   | 45         | 10         | 2         | 1         | 25         | 83         |
| 11         | 보건복지가족부 | 22         | 15         | 11        | 6         | 37         | 91         |
| 12         | 환경부     | 5          | 3          | 0         | 1         | 30         | 39         |
| 13         | 노동부     | 10         | 11         | 1         | 1         | 30         | 53         |
| 14         | 여성부     | 0          | 1          | 0         | 0         | 8          | 9          |
| 15         | 국토해양부   | 14         | 13         | 3         | 2         | 35         | 67         |
| 16         | 감사원     | 0          | 4          | 0         | 0         | 6          | 10         |
| 17         | 국정원     | 0          | 0          | 0         | 0         | 1          | 1          |
| 18         | 국무총리실   | 7          | 7          | 0         | 4         | 11         | 29         |
| 19         | 방송통신위   | 0          | 9          | 1         | 0         | 4          | 14         |
| 20         | 공정위     | 6          | 0          | 0         | 0         | 2          | 8          |
| 21         | 금융위     | 20         | 0          | 0         | 0         | 1          | 21         |
| 22         | 국민권익위   | 0          | 2          | 2         | 0         | 5          | 9          |
| 23         | 법제처     | 0          | 1          | 0         | 0         | 1          | 2          |
| 24         | 국가보훈처   | 2          | 3          | 0         | 0         | 0          | 5          |
| 25         | 국세청     | 0          | 0          | 0         | 0         | 2          | 2          |
| 26         | 관세청     | 0          | 4          | 2         | 0         | 0          | 6          |
| 27         | 방위사업청   | 1          | 0          | 1         | 0         | 1          | 3          |
| 28         | 경찰청     | 2          | 2          | 0         | 0         | 8          | 12         |
| 29         | 소방방재청   | 0          | 0          | 0         | 1         | 4          | 5          |
| 30         | 산림청     | 1          | 0          | 0         | 0         | 2          | 3          |
| 31         | 중소기업청   | 1          | 5          | 0         | 0         | 3          | 9          |
| 32         | 기상청     | 0          | 0          | 0         | 0         | 2          | 2          |
| 33         | 공동주관    | 13         | 10         | 5         | 1         | 43         | 72         |
| <b>합 계</b> |         | <b>247</b> | <b>170</b> | <b>51</b> | <b>24</b> | <b>457</b> | <b>949</b> |

※ '2012'는 과제성격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거나, 2012년이 되어야 마무리되는 과제임.

### 3. 최근 20년 한국의 국가비전

#### 가. 노태우 정부(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1989~1994)

□ 국가비전: 세계 속의 한민족민주공동체

○ 전략설계의 핵심가치: 조화(성장-분배, 개발-보전, 사회-개인, 국가-세계)

□ 국가발전의 목표: 통일된 한민족민주공동체

- ① 세계에 기여하는 민주국가
- ② 국토가 균형 발전된 통일국가
- ③ 절제 속에 풍요로운 복지국가
- ④ 창의와 합리를 존중하는 과학국가
- ⑤ 세계와 함께 하는 문화국가

□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이며 정권적 차원을 넘어선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미래상을 그려보라는 의도로 5년간의 시간을 주고, 최종보고서를 차기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음.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청사진은 다음 김영삼 정부에서 채택되지 못했음.

#### 나. 김영삼 정부

□ 별칭 “문민정부”

□ 국가비전: 신한국 창조

□ 국정지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 3대 실천과제: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

○ ‘세계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역사 바로 세우기, 세계화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의 한국을 창조해 내고자 했으나, IMF 사태로 성과 없이 끝났음.

**다. 김대중 정부(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1999. 11.)**

- 별칭 “국민의 정부”
- 국가비전: 세계 일류 한국
- 5대 비전과 10대 전략
  - ① 다원적 민주주의: 생산적 화합정치, 선도적 정부혁신
  - ② 역동적 시장경제: 지속적 경제개혁, 지식정보화와 교육혁신
  - ③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생산적 복지체제, 민주적 시민생활세계
  - ④ 협력적 공동체사회: 공생적 환경공동체, 문화적 다원주의
  - ⑤ 아시아 중추국가: 진취적 세계참여, 평화적 민족통합
- “제2건국위원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하여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꾀하였으나, 북한 퍼주기 논란과 측근들의 각종 부패사건에 휘말려 명예롭지 못하게 끝났음.

**라.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2002. 5.)**

- 국가비전: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 비전달성의 정신: 포괄적 실용주의
- “국가혁신”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
  - ① 반듯한 나라: 국민우선의 정치, 깨끗한 정부/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국익우선의 실리외교/바른 통일, 반듯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② 활기찬 경제: 향후 20년 6% 성장, 과학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세방화(世方化)에 부응하는 국토와 지역의 균형발전, 관치경제 청산과 자유시장경제 창달, 일자리 창출

③ 편안한 사회: 지속가능한 따뜻한 복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성발전/상생의 평등사회 실현, 국민의 안전보장, 즐기는 문화/함께 하는 문화

□ 집권을 기대하며 원대한 국정운영 청사진까지 만들었으나, 대선 패배로 좌절됨.

#### 마. 노무현 정부(제16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

□ 별칭 “참여정부”

□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국정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 12대 국정과제

① 외교·국방·통일 분야(1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 정치·행정 분야(3개):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③ 경제 분야(4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④ 사회·문화·여성(4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능란한 언변과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여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고 정권을 넘겨주기에 이르렀음.

## 바. 전반적 평가

-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들은 앞에서 요약한 기존의 비전들에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훌륭한 방향을 보여줌.
- 그러나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움.
- 대부분 세계, 일류, 선진 등의 최고 수사와 국가, 조국, 민주, ~주의 등의 거대담론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에게 공허한 정치구호 같은 인상을 줌.
- 대부분 지식, 정보, 문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 대통령의 삶이나 철학과 상통하는 이미지를 구현해 내지 못함.
- 모든 정권이 초기에는 훌륭한 국가비전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실천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정책 추진에 혼란을 겪었음.
-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비전은 제시되는 그 자체로서 끝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비전을 이루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4.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 평가

### 가. 국가비전의 구조

#### 1) 긍정적 평가

- 기존 국가비전들과 달리 비교적 탈 정치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줌.
  - 기존의 비전들은 주로 국가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치를 늘 우선시 해왔음.
  -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국가보다 개인, 정치보다 사회우선의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력이 신장되며, 개개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
- 비전을 하나의 추상적 단어로 제시하기보다 개인, 사회, 정부의 구체적 모습으로 그려낸 것도 국민적 설득과 호소에 유리함.
  - 그러나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정부”라는 설명은 생략되고 “선진일류국가”로만 나와 있음.
- 비전 달성을 위한 기관별 세부 실천과제와 추진시기 구체적으로 제시
  - 이러한 탈정치성과 구체성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오로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최고경영자 반열에 오르고, 국가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이명박 대통령의 치열한 삶과 상통하는 모습을 보여 줌.
- 과거 김영삼 정부나 한나라당의 비전과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인간중심의 선진국가” “국민우선의 정치” “상생의 정치” “선진정부” “정의로운 법치사회” “선진경제” “활기찬 시장경제” “역동적 시장경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성숙한 시민사회”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음.

## 2) 부정적 평가

- 개인, 사회, 정부에 관한 구체적 모습을 빼고 “선진일류국가”만 내세우면, 매우 상투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게 됨.
  -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선진, 일류, 품격, 고상함” 등의 단어에 대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
- 국가비전의 구조가 행동규범, 국정목표, 국정지표, 국정과제 등 너무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약간 현학적인 느낌을 줌.
  - 따라서 “뭔가 그럴 듯하지만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임.
- “탈이념”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부의 철학과 이념이 너무 드러나지 않음.
  - 물론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이 한국의 기본적인 정치지향이며, 이명박 정부의 토양임.
- “창조적 실용주의”는 시대적 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삶에 가장 잘 부합되는 철학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동규범”으로 지나치게 격하되었음.
  - 정부출범 초기에 야당이나 좌파 세력이 “실용주의”를 약간 희화화 시키거나 폄하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지나치게 위축된 듯함.
  - 실용주의는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중요한 철학적 토대이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훌륭한 정치철학이기도함.
- 국가비전에 대한 참 신도(true believer) 집단이 없으며, 따라서 비전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대적 요구인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음.

## 나. 국가비전과 국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

□ 2009년 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25명 웹 메일 조사

- 응답자들의 배경: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보수성과 우파 성향이 약간 더 강함(표 2-3 참조).
-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종합부동산세, 3불정책 등에 대해서는 좌파성향이 약간 더 강함(표 2-4 참조).

<표 2-3> 응답자들의 배경(단위: %)

| 변수                 | 진보적 성향               |      | 보수적 성향 |                     |
|--------------------|----------------------|------|--------|---------------------|
|                    | 성                    | 남자   | 48.7   | 51.3                |
| 연령                 | 30대 이하               | 42.8 | 57.1   | 40대 이상              |
| 학력                 | 고졸 이하                | 31.2 | 68.8   | 대재 이상               |
| 이념적 지향             | 개혁 중시                | 23.9 | 76.1   | 안정 중시               |
| 지지 정당<br>(없음 25.1) | 민주/민노/진보신<br>당/창조한국당 | 34.9 | 40.0   | 한나라당/자유선<br>진당/친박연대 |

<표 2-4> 응답자들의 쟁점별 입장(단위: %)

| 주요 쟁점  | 좌파 성향    |         | 우파 성향 |          |
|--------|----------|---------|-------|----------|
|        | 경제적 불평등  | 빈부격차 중시 | 54.9  | 45.1     |
| 국가보안법  | 철폐 또는 대체 | 35.1    | 64.9  | 부분 개정/유지 |
| 한미 FTA | 반대       | 42.7    | 57.3  | 찬성       |
| 종부세 완화 | 잘못한 일    | 56.0    | 44.0  | 잘한 일     |
| 대입 본고사 | 반대       | 49.7    | 50.3  | 허용       |
| 기여입학제  | 반대       | 66.6    | 33.4  | 허용       |
| 고교등급제  | 반대       | 62.5    | 37.5  | 허용       |

## 다. 국가비전에 대한 인지 및 공감 정도

□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에 대해 66.9%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고 있음.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설명을 본 후에는 58.3%가 대체로 공감함(표 2-5 참조).

<표 2-5> 국가비전 인지 및 공감 정도(단위: %)

| 질문내용 및 응답비율  | 인지/공감 정도                      |
|--|-------------------------------|
| <b>귀하는 이러한 정부의 국가비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b><br>1. 여러 번 듣거나 보아서 잘 알고 있다..... 5.6<br>2. 몇 번 듣거나 보아서 대충은 알고 있다..... 27.5<br>3. 몇 번 보거나 들긴 했지만 잘 모른다..... 46.7<br>4. 전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20.2                                 | 인지 33.1<br>비인지 66.9           |
| <b>귀하께서 정부의 국가비전에 대해 이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는 이러한 국가비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b><br>1.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8.4<br>2.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50.0<br>3.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31.3<br>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0.3                              | 공감 58.3<br>비공감 41.7           |
| <b>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정부 5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b><br>1. 매우 제대로 가고 있다..... 2.9<br>2. 대체로 제대로 가고 있다..... 26.9<br>3.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46.4<br>4.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3.7 | 제대로 가는 편 29.9<br>잘못 가는 편 70.1 |

## 라. 국정 1년에 대한 평가

□ 지난 정부 5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9.9%임(표 2-5 참조).

○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30.6%(대선투표율 62.9%에 득표율48.7%를 곱한 수치)였으므로 사실은 지지율에 거의 변화가 없는 셈임(0.7% 감소).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정방향에 대한 지지도 보다 훨씬 낮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더 낮게 나타남(표 2-6 참조).

○ 그러나 국정기조나 국정과제를 보여 준 후에는 약간(3.2%) 올라감.

○ 이것은 국정방향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정1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48.8%는 앞으로 국정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절실히 필요함.

<표 2-6> 최근 각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단위: %)

| 정부            | 잘못한 편            | 잘한 편        |
|---------------|------------------|-------------|
| 김대중 정부        | 46.2             | 53.8        |
| 노무현 정부        | 52.5             | 47.5        |
| 이명박 정부 1년     | (국정기조 제시 전) 77.8 | 22.2        |
|               | (국정기조 제시 후) 74.5 | 25.4        |
|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 (잘못할 것) 51.7     | (잘할 것) 48.3 |

□ 5대 국정지표의 정책기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정책기조는 복지 분야로 나타났으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기조는 정치·행정 분야로 나타남(표 2-7 참조).

○ 5대 국정지표 중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학기술정책이며, 가장 잘하지 못하는 분야는 경제와 정치·행정 분야로 나타남.

<표 2-7> 5대 국정지표에 대한 상대적 평가(단위: %)

| 구 분               |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능동적 복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 합계    |
|-------------------|--------|----------|--------|------|----------|-------|
| 가장 바람직한 정책기조      | 8.3    | 18.5     | 36.0   | 21.5 | 15.7     | 100.0 |
|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기조  | 28.3   | 27.7     | 12.7   | 14.6 | 16.7     | 100.0 |
| 정부가 가장 잘하는 분야     | 6.5    | 16.1     | 25.4   | 27.1 | 24.9     | 100.0 |
| 정부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분야 | 31.1   | 32.5     | 13.7   | 11.0 | 11.7     | 100.0 |





**Ⅲ.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 Ⅲ.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 1. “인재대국”을 위한 4대 국정전략, 20대 국정과제 평가

□ 먼저 인재대국을 위한 4대 전략별 국정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하였음(표 3-1, 3-2, 3-3, 3-4 참조).

- 각 국정과제의 추진시한과 주관기관을 명시함.
- 각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들의 웹조사 결과를 제시함.

□ 각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평가하였음.

- ① 과제선정의 적절성
- ② 과제목표의 달성도
- ③ 과제수행 평가 및 향후 대책

#### 가.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국정전략 13]

□ [국정전략 13]의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관련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적절한 과제들로 구성됨.

□ 그러나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목표달성의 성과가 별로 크지 못함.

-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의 조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백화점식 정책과제 추진을 탈피하여 중점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정책과제의 내용에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체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기관, 학계, 학회, 국회, 행정부, 사회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정책결정 및 집행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정책추진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 1) 학교의 다양화 [과제 61]

- 학교의 다양화는 정보화·다원화·글로벌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임.
- 학교의 다양화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함.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요구에 맞게 정해진 정책인지 근본적으로 짚어 보아야함.
- 아울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인지도를 신중히 검토해 보고, 수요자들의 요구 수용 또는 설득을 통하여 수요자와 정책 간의 간극을 해소해야함.
- FGI(집단심층토의) 결과, 소외받는 서민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다양화 정책은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비교적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 전문가 평가는 높지만, 일반인들은 정책의 인식도가 낮아 평가도 낮게 나타남.
- 다양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정책연구 및 조기집행 성과가 있으나, 적용범위를 단기간에 너무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음.

- 다양화를 모든 학교에 하나의 틀로써 강요하면 오히려 획일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이 먼저 정착되어야 좋은 학교, 다양한 학교가 될 수 있음.
- 학교특색 살리기 정책은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조치가 선행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학력인정의 다양화는 좋으나 학점인정제 등의 경우, 학력 충족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학점인정제의 질적 관리도 필요함.
- 학교다양화 정책에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학입시에서의 수용여부와 연계하여 다양성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학교 정책은 좋으나 급속히 확대하면 위화감 조성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발성에 의한 내부 개혁을 통해 체제개선 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함.

## 2) 학교의 자율과 책임 확대 [과제 62]

-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는 교육선진화의 기본적 토대임.
-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나 일반적 인식 모두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정책목표의 국민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함.
-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함.
- 모든 학교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그 범위와 종류를 더욱 확대해야함.
- 자율과 책임확대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체계를 효율화해야함.
- 지방행정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개정법에서

교육위원회가 일반자치의 상임위원회로 정해져 있으나, 실행되기 전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정해 주어야함.

- 초·중등교육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함.
- 학교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 교장에게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대폭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함.
- 단위학교 선발, 교육 운영 편성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권한의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단위와 도 단위의 업무 영역 분담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 도 단위 자치의 정책 확립과 제도 정착이 필요함.

### 3) 교원의 전문성 제고 [과제 63]

-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필수적임.
- 이 문제는 과거 각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항상 등장했으나, 실질적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함.
- 일차적으로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중요하며, 아울러 교원 채용이나 교장 임용방식 개선도 중요함.
- 교원 채용을 단위학교 채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여 교사와 교장(초빙, 공모)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위학교 채용 시 임용과정의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함.
- 교사 전입과 전출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교원평가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평가제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과제의 목표달성도는 낮은 편임.
- 교원평가에 대한 법령제정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자격증 유효기간제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원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되 지나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함.

#### 4) 알차고 흥미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과제 64]

- 정보화·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나 학습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변화에 부응하여 전자교과서와 인터넷활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u-learning 학습 환경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교과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음.
  - 미래교육대비 u-러닝을 위한 좋은 조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개발과 채택에 따른 이익배분에 관한 논의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인정제도 확대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과다 경쟁이 예상됨.
  - 역사교과서 개편이 이념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것 외에는, u-러닝 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자율권 확대 등이 잘 준비되고 있음.
  - 정부가 관리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명기하고 이외의 것은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제도, 교과목 통합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교수방법 및 교과내용 개편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자율권 확대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2·3학년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각급 학교 교장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과제 65]

-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화과정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미디어나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함.
- 그러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임시적·한시적 형태를 벗어나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대안에 관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체계 구축,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가 중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함.
-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며,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서 발전기금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발전기금의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함.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관련 제도를 도입할 때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보·문화 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의 확충 및 운영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를 지역정보센터 및 문화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 교육복지 확대 [국정전략 14]

### 1) 학업에 있어 가난의 문제 해결 [과제 66]

-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계층 상승이동의 요인이 되므로, 교육의 불평등이 바로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짐. 이를 차단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제가 대단히 중요함.
- 실제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 교육관련 정책과제 중에서 이 과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조치는 2009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임.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과제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함.
- 이 과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국내유입을 위한 장학금제도 확충도 필요함.

### 2)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과제 67]

-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타당함.
- 비교적 학교와 관련이 많은 구체적 과제들이며, 추진기간도 짧아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영어교육, 학업성취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영어몰입교육,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에서 국민적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영어몰입 교육에 대한 초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실패로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옴.
  -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너무 많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의 합리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학력증진을 위한 방안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될 수 있음.

### 3)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책임 [과제 68]

- 학교의 목적은 물론 학생의 학력 증진이지만, 그에 앞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러한 것이 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함.
- 학생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정부정책이 백화점식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 핵심과제와 우선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학생건강지표 개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므로 새로운 정책과제로는 부적절함.

- 이 과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에 비해 전문가의 평가는 대단히 낮은 편임.
- 학교의 주요 기능 중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각종 비상시 대책, 식중독 대책, 학교주변 관리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4)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내실화 [과제 69]

-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함.
-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성인 단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함.
- 정책추진의 시기를 2010년 상반기와 2012년 하반기로 미루어 두어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 탁아문제와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직장여성이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함.
- 최근 유아교육비가 젊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감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공교육화, 유아교육과 탁아 기능 통합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함.
- 유아교육과 탁아 기능의 일원화 및 양자의 결합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통한 기본 체제 구축과 특수교육의 연령별 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함.

-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학교 단계를 넘어서까지 세워야함.
- 취업과 일상생활 문제 등은 타 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5) 평생학습 환경 조성 [과제 70]

- 이 과제는 인재 중심의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선진국에서 21세기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과제임.
- 이 과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교육개혁 정책의 장기 핵심의제였음. 따라서 의제 자체의 선도적 성격 보다는 정책추진의 과감성과 실효성이 중요한 과제임.
- 평생학습사회라는 추상적 이념의 반복을 넘어 구체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 등 미래 쟁점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과 개념규정을 분명히 해야함.
- 2009년 이후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 쟁점은 구조조정과 실업극복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문제가 될 것임. 이에 대비해 고등교육과 그 이후 계속교육 부분에서 교육훈련-자격-일을 통합하는 것은 선진국 공통의 주요 정책과제임.
-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협력 (Ministerial Cooperation)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 특히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평생 학습계좌제 등은 거의 전 부처가 협의·협력해야만 추진 가능한 과제들임.
- 그러나 이러한 부처 간 협력기능이 위축되어 이 과제의 추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다. 세계수준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국정전략 15]

### 1) 대학의 자율 확대 [과제 71]

-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은 대학자율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과제는 전략 15에 잘 부합하지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재정회계의 자율보다 “학사의 자율”을 중심으로 대학 내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해야함.
- 기존의 행정적 권한 위임·위탁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대학 간 관계 정립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체제를 전면 개정하는 Top-down 방식의 자율화 패러다임이 필요함.
- 대학정보공개와 대학자율화 과제 등은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대학운영자율화와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1, 2단계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국립대재정회계법안 발의 등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지난 10년간의 방식인 교육규제개혁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ad-hoc committee)를 통한 개별적 고충처리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대학자율화 정책은 그 성격상 행정적 차원의 조치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법적지위와 자율화 사항을 명시한 법률 및 자율화 체제를 끌고 갈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라는 두 가지를 먼저 갖추어야함.
- 현재 대학자율화와 관련된 가장 큰 불만은 ‘평가 후 재정지원차별화’라는 행·재정적 규제이며, 이 문제는 조만간 자율화 정책의 핵심쟁점이 될 것임. 자칫하면 오히려 “자율화의 타율화”가 될 수도 있음.
- 세부실천과제 중 ‘대학운영자율화’는 “사립대학의 자율화”로,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국립대학법인화’로 과제명칭을 바꾸고, “고등교육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개정”을 세부실천과제에 추가함으로써, 이 과제의 본질과 성격을 명료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

- 대입자율화 3단계 정책은 아직 “3불 정책” 논란에 따른 정책문제의 왜곡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올바른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대입본고사 문제를 ‘자율화’라는 차원에서 잘못 다루면, 또 다시 ‘사교육비팽창’이라는 ‘입시정책의 덫’에 갇히게 될 것임.
- 국립대 법인화는 개별대학의 희망에 따라 법인화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비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모든 국립대학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각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수순의 뒤바뀜으로 인해 서로 모순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 고등교육법상의 단일 조문하나로 모든 국립대학을 일괄 공공법인으로 선언하고, 재정회계법 제·개정, (교육)공무원법 제·개정 등을 통하여 후속조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임.

## 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과제 72]

- 이 과제는 우수인재 전략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21세기 이후 교육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 대학개혁정책 흐름과 비교하면, 20세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음.
  - 이 과제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국가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연구기관육성”의 두 과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의 정책형성 방향 명확히 설정 필요
  - 이와 관련된 세부실천과제는 기존의 BK 21 사업을 승계 발전시킨 World Class University(WCU) 사업 사례처럼,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산학협력, 국제교류협력, 연구간접비 확대)의 발전적 연장선에 있는 과제들임.

- 대학 퇴출·통폐합 정책은 그 목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음.
  - 효과적인 정책수단 없이 목소리만 크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처럼, 법률형태로 정해진 정책수단을 먼저 확보한 후 그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함.
- 말만 앞선 지지부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히려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범정부 과제임.
  -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시급히 해야 함.

### 3) 연구자 중심의 환경과 여건 조성 [과제 73]

- 이 과제는 지난 10년간의 이공계 기피 논쟁 및 고등교육·연구 재정지원 정책의 부산물인 연구개발 관료제가 연구소와 대학의 자율화에 끼친 부작용에 대한 반성 끝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의제로 확립된 매우 시의적절한 선도적 과제임.
  - 한국은 GDP 대비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는 낮은 비효율의 대표적 국가임.
  - 11조원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012년까지 약 16조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원천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예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계 뿐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이 문제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자 지위에 관한 입법 보장을 동반해야함.
  - 기존의 과학기술/산업기술 개발 법제들은 연구개발 관료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구기관 노동조합 번성의 원인을 제공했음.

- 또한 연구자들을 관료제의 객체로 소외시키거나, 대학교수들을 출연 연구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시장의 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연구개발 사업체제 개편안’을 내면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56개 단위사업을 36개로 통폐합해 연구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러한 조치는 국가R&D 중 교과부 소관 사업 분류체계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일 뿐, 연구개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 중심’을 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부문 R&D의 활성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끊임없는 강조에도 전반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를 본 과제 속에서 함께 반영해야함.
- 교과부는 법제상 지위 면에서 이 과제의 책임부서일 뿐, 예산집행관리 제도 면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정책책임자임. 따라서 양 부처가 서로 이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진지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출연연 R&D 성과 평가관리를 중심으로 교과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과제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식경제부 중기청의 실행 협력책임도 강화해야함.

#### 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과제 74]

- 기존 정책은 세계화의 중요한 양상이 인력이동의 세계화에 있음을 간과해 왔는데, 이 과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한 국정과제로써 인재강국의 전략에 적합함.
- 특히 국경을 넘어선 인력이동의 확산이 절실한 시기에 청년층의 시야를 세계로 넓힌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고 시의적절함.
- 기획재정부의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계획”(5년간 1조원 규모, 총6개 분야 47개 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은 이 국정과제의 정책



목표와 성격에서 벗어난 것임.

- 이 과제는 원래 “해외유학 중심으로 왜곡된 Out-bound 흐름을 취업, 인턴십, 해외봉사 중심으로 정상화한다”는 정책 rationale에 입각한 것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세계적 수준의 첨단고급인력 양성사업으로 변질시켰음.
  - 교과부-노동부-외교부 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재계획하고, 자금 지원을 이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수정해야함.
- 기획재정부의 5년간 1조원 예산지원이 주로 대학에 공급되는데 힘입어, 교과부의 <해외인턴 3만 명> 목표는 비교적 무난히 달성될 것임.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 사업의 성과라기보다 이미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또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국내 대학들이 국제교류에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임.
  - 국제협력단 중심의 해외봉사협력정책 전달망을 갖춘 외교부의 <해외 자원봉사 2만 명> 목표는 재정자금의 원활한 지원만 보장되면 쉽게 달성될 것임.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1조원 사업이 이른바 <미래 산업 청년리더>에 집중됨으로써, 그 추진 재원을 향후 늘어날 ODA 자금에서 충당해야 할 불확실한 처지에 있음.
  - 노동부는 기존 직업훈련망과 해외취업지원망을 통하여 이 정책과제의 수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청년리더 10만명 사업”과는 유리된 내용이므로 <해외취업 5만명> 목표가 어려워지게 되었음.

## 5) 체계적 영재육성시스템 구축 [과제 75]

- 인적 자원의 경쟁력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영재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아직도 영재아의 발달과정에 어려움이 큼.
-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영재교육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우수영재가 한국의 교육제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령·제도·실제 운영과정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어야함.
- 영재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성 강화, 영재교육 시스템의 효율화, 과학·예술영재의 발굴 육성 과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시기가 너무 늦게 설정되어 있음.
- 대학에서의 우수영재 조기수용 여부와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함.
- 인재대국의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과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나 입학전형 방법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라. 미래 과학기술 발전[국정전략 16]

- 교육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이 아직은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을 기대했으나, 과학기술계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를 가져왔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단기와 중장기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담보해주는 정책을 근간으로 삼아야함.
-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은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담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여주었음.
- 연구자 친화적 연구개발 관리와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수립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여건을 만들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논의는 소문만 무성하고 실행은 실종되었음.

## 1)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과제 76]

- 이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와 결부시켜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과제임.
  - 세부추진과제 중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운영’과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지식경제 통합 기술청사진 수립’은 새로운 정책으로서 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총괄할 지식경제부의 기술정책 방향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러한 점에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 유도’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함.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인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총괄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약화되었음.
  - 따라서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으로 국과위의 R&D 자원배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하고, 국가 R&D 활동의 방향성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77 전략’으로 명료화함으로써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방향은 잘 설정하였으나, 실행주체와 실행방식, 실행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계가 불충분함
  - 지식경제 통합 기술 청사진의 경우, 핵심기술 과제의 선정과 연구개발 목표 제시 등 실행전략의 구체성은 매우 높으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방식 등의 제시는 미흡함.
  -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과제의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진방향에 대한 철학이 희석되거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가차원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위해 과제 추진의 성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세부과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운영”은 5년마다 수립되어 온 지속성 과제인데, 지금까지 정권의 마지막 5년 차에 계획수립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철학과 정책기조에 맞춰 다시 수립하는 낭비를 반복하고 있음. 그러므로 집권초반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위축상황을 극복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 정부의 국정과제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혁신정책 문제로 확장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주무부처 외에 환경, 노동, 복지 등 경제·사회 전 영역을 염두에 둔 총체적(holistic)이고 통합적(integrated)인 접근이 필요함.

## 2) 민간 전문가 주도의 R & D 시스템 구축 [과제 77]

- 민간주도의 과학기술혁신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주요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혁신의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얻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그 구성이나 역량 및 운영 전략이 미흡함.
-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기획조정을 담당하던 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주관부처 개념이 약화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도 미흡하여,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대부처제도의 취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상근 전문위원체제 도입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제도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현재까지 주로 국가 과학기술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 국가 R&D 예산 배분 방향 및 투자 전략 설정, 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주요 과학기술진흥시책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과학기술 관련 주요 부처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범 부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R&D 자원배분 민간인 중심 전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R&D 자원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전문위원회는 각 부처의 주요 R & D사업에 대한 심층적 검토·분석 및 부문별 R & D 예산 배분의 방향을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함.

### 3) 기초·원천연구 진흥 [과제 78]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연구 분야에 융합형 원천기술을 포함한 것은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국내외 주요 관련 정책들에 비추어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함.
- 그 동안 고속압축성장 위주의 단기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들을 주로 추진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관심 고조와 예산확대는 매우 바람직함.
- 융합형 원천기술의 본질상 범부처적 연계와 협조를 통한 기획 및 사업 추진이 중요함.
-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할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과학기술 분야에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T 중심의 융합기술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초원천연구와 관련하여 산업정책 측면만 강조하기 보다는 과학기술 전반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원천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개발 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함.
- 최종적인 원천특허 확보만을 연구목표로 설정할 경우, 연구진행상의 진척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단계별 성과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4) 녹색기술 발전 [과제 79]

- 녹색기술은 글로벌 환경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기술혁신 패러다임과 경쟁력의 원천을 결합한 변화의 원동력임.
-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과 녹색성장기술개발은 5대 국정지표에 포함된 ‘활기찬 시장경제’와 ‘인재대국’의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인프라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개척, 청정에너지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에도 필수적인 과제임.
- 현재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에서 경쟁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융합기술’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 중임.
- ‘녹색성장’과 ‘융합기술’은 현장 연구개발자들에게 마치 유행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포장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 인식도 있음.
-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한 정책목표 달성 요구에

있으며, 정책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 ‘녹색성장’이 정책목표라면, ‘융합기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융합기술’을 너무 강조하면 산업측면에서는 니치마켓으로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융합기술’과 ‘기술융합’의 차이를 고려해야함.
- 각 부처 사업들의 정책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산업의 메가트렌드 분석에 입각한 정교한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를 설계해야함.
-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 스스로 정책 목표와 수단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핵융합연구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자원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함.
  -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 해 예산의 1/3을 에너지 수입에 쓰는 상황에서 무한 청정에너지원의 개발은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임.

## 5) 과학문화의 생활화 [과제 80]

- 문화현상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은 21세기 새로운 국가 브랜드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이 과제 선정은 매우 적절함.
- 지식기반·고기술 사회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과학문화 생활화는 국정 어젠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책과제임.
- 최근에는 과학문화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학교 교육, 기업 및 연구소의 대중적 활동, 방송 매체를 통한 과학 문화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음.
  -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기술 운영’ 과제의 경우, 2008년 10월 생활과학 교실사업 운영학교로 전국 1,07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는 전체 초등학교의 18.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과제의 출발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농어촌지역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 위주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은 지역 내 대학 및 과학기술인력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과학기술 유휴인력의 활용 효과까지 기대됨.
  - 기존 어린이 과학프로그램의 낮은 수준과 부족한 장비 문제를 극복하면서, 활동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포괄규모를 넓혀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 ‘초중고 수학·과학교육과정 내실화’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하기에 앞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에너지, 환경 등 아이디어와 공감대가 큰 주제를 중심으로 계도 차원을 넘어선 참여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정비전과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과제

### 가.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제안

- ‘인재대국’의 국정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부정적임.
  - 일반인들은 막연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엘리트 교육에 치중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책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상기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면 과연 “인재대국” 전략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회의적임.
  - 전반적인 정책의 기초가 산업사회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나 미래 사회변동의 추세 반영하지 못함.
  -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과제이고, 모든 정책팀이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국민적 설득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핵심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인재대국’ 전략에 속한 20대 정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은 올바른 방향임. 정보화, 글로벌화, 다원화, 네트워크 등과 같은 미래 사회변동 추세에 잘 부응함.

- 위에서 검토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의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가장 큰 장애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무장한 교육평준화 신봉자들임.
  - 현재 여론상 우세한 평준화 논리를 어떻게 설득하며,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뿌리내리게 하느냐가 관건임.
- ② 교원평가제 조기시행: 미래지향적 교육의 선결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변화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제는 교원평가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착시키는 일임.
  -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방어적 논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교육혁신의 두 번째 큰 장애가 될 것임.
  - 현재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원평가에 대한 법령 제정과 시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 현재의 인재양성 정책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임.
- 아무리 좋은 정책목표나 과제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추진의 탄력을 받기 어려움.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함.
  - 따라서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정책전반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여론형성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교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념과 설득력을 갖춘 인물들을 정책결정 및 집행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세력을 형성해야 함.
- ④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강화: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은 학교자율에서 시작됨.
-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회계'의 자율보다 '학사'의 자율이 더욱 중요함.

- 특히 대학자율화 정책은 그 성격상 행정적 차원의 조치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법적지위와 자율화사항을 명시한 ‘법률’과 자율화 체제를 끌고 갈 ‘제도’(institutionalization)라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가능함.
  -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교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함. 이러한 책임성을 통하여 그 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된 대학의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 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량강화: 지난해 봄부터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 진전이 없는 통·폐합논의로 인해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2009년에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출연연 통폐합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두어야 함.
- ⑥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분야와 통합된 과학기술 분야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주관부처 개념이 약화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제도화도 미흡하여,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상근전문위원제 도입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⑦ 녹색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은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담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음.
- 녹색기술은 글로벌 환경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기술혁신 패러다임과 경쟁력의 원천을 환상적으로 결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임.
  -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으로서, 창조적이며 선진일류

국가 태동을 위한 경제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임.

- 최근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이 사용자에게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녹색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인식 및 태도나 행동 차원의 문제임.

## 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1)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보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다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습관이나 학습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음.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함.
-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모두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개혁이나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었음.
- 이 공교육 시스템은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rationale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즉,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표준형 인간을 ‘공장제 방식’(factory system)에 의해 대량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며, 교육은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함.
-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사회가 형성되면서 공교육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우선 지식의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속도도 갈수록 빨라져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나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사회에서 응용하기도 전에 노후화됨.

- 사회화 과정도 총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이전에는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행자(agent)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화과정에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채워가고 있음.
  - 생애주기 또한 학습과 일과 여가생활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일경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중경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므로 이제 인재양성 정책은 학교 중심이 아니라, 사회화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어야함.
- 생애 전 과정을 다루는 평생학습사회,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화 정책이 되어야함.
  - 그리하여 학교를 넘어 사회화과정 전체에 대한 새로운 제도화의 길을 모색해야함.
- 미래의 학교는 사회와 유리된 특정 시기의 ‘학생’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각 부문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함.
- 예컨대, 학교가 지역 정보센터나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이 돼야함.
  - 학교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의 한 부분이 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변해야함.

## 2) 사회정책의 시각과 범위 확대

- 한국사회에서는 불평등의 확대와 다양성의 증가, 그리고 가치관의 갈등 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하였음.
- 정보화 · 글로벌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원심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

므로 어떻게 사회적 구심력을 복원하느냐가 중요함.

-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아직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뚜렷한 비전이나 정책을 내놓지 못했음.
  - 얼마 전 출범한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됨.
- 현재 한국에서는 불평등 증가에 따른 계층 간 통합, 다양성 증가에 따른 문화적 통합, 세대 간 이질화에 따른 세대 간 통합 등이 동시다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위기가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임.
  -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세대 간 소통의 단절과 경험의 이질성에 따른 세대격차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잉태하고 있음.
- 세대 간 격차와 이질성은 아직까지는 직접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 신뢰의 저하 및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강화는 세대 간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소지가 높음.
  - 2008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복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세대 간 건전한 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
-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세대 간 통합이 취약하면 공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인재대국은 고사하고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도 실패할 것임.
- 사회정책의 시각과 범위를 좀 더 거시적, 장기적, 포괄적으로 확장해야함.
  - 미래 국가비전을 달성하는 핵심동력은 “인재대국” 전략 속에 있음.
  - 사회정책은 소외계층·장애인·소수자·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함은 물론, 그 틀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구성원들의 생애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역량을 기울여야함.
  - 교육정책은 학교 차원의 교육을 넘어 “전 구성원의 사회화정책”으로 확대되어야함.
  - 사회정책은 복지 차원을 넘어 전 구성원의 생애역량을 강화하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확장되어야함.





**I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경제 및 복지 분야**



# I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 경제 및 복지 분야

### 1. 정권출범 전후 환경변화와 정책기조

#### 가. 역대정권 출범 전후의 환경변화와 정책기조

##### 1) 환경변화

- 역대정권의 정권환경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모두 정치적 변혁을 겪었다는 점과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

<표 4-1> 새 정부의 출범 당시 상황 비교

| 구 분            | 김영삼 정부<br>(93. 2. 출범)                           | 김대중 정부<br>(98. 2. 출범)                    | 노무현 정부<br>(03. 2. 출범)   |
|----------------|---|--|---|
| 정치적 의의         | · 구여권의 정치기반 대부분 승계                              | · 여야 정권 교체<br>· 구 야권의 정치기반 대부분 승계        | · 정치적 세대교체<br>· 정치적 기반 취약   |
| 대외여건           | · 미국과 농산물 개방 협상<br>· WTO 출범(94.1)<br>· 북핵 문제 대두 | · 아시아 외환위기<br>· IT 산업 급팽창<br>· 중국 경제의 부상 | ·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 강화, 통상압력 강화<br>· IT 이후 새로운 성장 견인력의 부재<br>· 북핵 문제 대두 |
| 대내여건<br>(경기상황) | · 경기 침체 지속                                      | ·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 지속                       | · 완만한 상승세 후 하락기 진입  |
| 경제정책 키워드       | · 세계화, 신경제                                      | · 지식 기반 경제                               | · 동북아 허브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4), 「참여정부 1년의 경제 성과와 과제」 에서 인용

- 현대경제연구원(2004)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정책 여건은 비교적 김영삼 정부 출범 시기와 유사
  - 세부적으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권의 정치적 기반을 승계하고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과 대내 경기 침체, 미국 주도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 재구축, 북핵문제의 대두 등에서 두 정부의 출범 당시 상황은 유사한 면이 많음.
  - 경제여건의 불안과 경기침체라는 점에서는 김대중 정부와도 유사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는 1998년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으며,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특수요인 면에서 차이를 보임.
-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김영삼 정부는 침체된 경기상황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각 계층의 지나친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는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국민의 경제의지 약화를 초래
  - 노무현 정부는 경기침체 상황은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요인의 경우 분식회계와 같은 기업 부실만 제시
-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차이는 결국 정책 운용에 반영되어 김영삼 정부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대응책과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정책을 마련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범 초기의 경기침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소극적인 경기정책을 시행
  - 또한 대기업 개혁정책을 강조하며, 노동쟁의에 대해서 편향적인 자세를 보여 반시장적, 반경제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

## 2) 정책기조의 비교

<표 4-2> 정권별 정책 기조와 내용

| 구 분                              | 정책기조  | 개혁조치  | 경제정책   | 복지정책  |
|----------------------------------|---|---|--|---|
| 김영삼<br>정부<br>(1993.2-<br>1998.2) | 부정부패척결,<br>경제회생, 국가<br>기강확립   | · 금융실명제 실시<br>· 금융소득종합과세<br>· 부동산실명제<br>· 농어촌특별세 신설<br>(1994)               | · 불황타개를 위한 사<br>회간접자본 확충<br>· 농어촌환경개선 및<br>농어민 후생복지<br>증진 대책   | · 개인연금제도입<br>(1993)<br>· 고용보험제도입<br>(1995)<br>· 농어민 국민연금<br>확대(1995)  |
| 김대중<br>정부<br>(1998.2-<br>2003.2) | 외환위기 극복<br>과 국가경쟁력<br>제고, 전면적<br>시장개방, 정부<br>기능축소, 민영<br>화와 규제완화,<br>노동시장 유연<br>성 | · 기업구조조정 및<br>재무 구조개선을<br>위한 조세지원<br>· 국제청 품목별조직<br>에서 기능별조직<br>으로 개편(1999) | · 금융 및 기업 구조<br>조정<br>· 실업대책에 재정<br>투입<br>· 국채발행 급증 및<br>적자기조<br>· SOC 투자 확대<br>· 정부조직개편: 재정<br>경제부 및 기획예산<br>처 신설 | · 생산적 복지<br>· 전국민국민연금실시<br>(2004)<br>· 국민기초생활보장<br>제도(2000)<br>· 의약분업,<br>· 의료보험통합<br>· 고용보험,산재보험<br>확대<br>· 근로복지기본법제정<br>(선택적근로자복지<br>제도)<br>· 공무원연금개혁 |
| 노무현<br>정부<br>(2003.2-<br>2008.2) | 더불어 사는<br>균형발전 사회,<br>경제와 사회분<br>야의 조화로운<br>발전                                    | · 부동산대책<br>(2005)   | · 적자재정기조<br>· 행정수도이전추진<br>· 국가균형발전특별<br>회계(2005)   | · 참여복지<br>· 사회적일자리 창출   |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6), 「구조적관점에서 본 한국의 주요경제정책」을 기초로 제작성

□ 김영삼 정부의 정책기조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그리고 국가기강확립으로 요약

-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명시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평가
- 제6공화국 후반기 땅값 폭등과 물가불안이라는 경기불황을 안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당시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일신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경제" 건설을 위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100일 간에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

- 그러나, 100일이라는 단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신경제 100일 계획은 역사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조급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기간의 실패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실패
-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이은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이 됨.
-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는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 전면적 시장개방, 정부기능축소,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시장유연성 확보등과 같이 광범위하였음.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예산조기 집행,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
- 외환위기 극복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기업의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의 과도한 채무보증의 발생을 억제
- 국세행정조직을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납세서비스, 조사, 징수 등 기능별로 전문조직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기능별 상호견제로 부조리 소지 제거가 가능토록 하였음.
- 단기간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저금리기조, 신용카드 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신용카드관련 부채가 급증하여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며 복지재정확대 추진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노무현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큰 정부·작은 정부의 논란의 불씨가 되었음.
-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경제와 사회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세출확대를 통한 적자재정기조로 재정정책이 추진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유도 시도
-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증권집단소송제,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5대 핵심과제로 제시
- 시장경제 체제의 경제논리보다 분배를 앞세운 반시장적 노동편향적인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념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중산층,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등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
- 그러나,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정책평가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

## 나.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의 환경변화

- 10년만의 여야의 정권교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172석을 획득하는 압승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거대 여당의 시대가 열림
- 그러나 출범초기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서 시작된 촛불정국은 정권초기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음.
- 이에 따라 인수위 당시 설정된 개혁과제의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노무현 정부에서 1년간 끌어 오던 한·미 FTA의 국회비준도 여야의 극한 대립을 야기하였음.

- 이러한 각종 정치사회적 정국변화와 함께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계속된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락으로 유가가 한 때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등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을 받았음.
  - 이러한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락은 국내경기의 경기 부진 속에서도 국내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급등으로 이어져 한 때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보였음.
  - 2008년의 국내소비자물가의 상승율은 국내경기의 경기 부진 속에서도 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2008년 1월 3.9%에서 7, 8월에는 5.9%, 5.6%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월 들어 둔화됨.
- 이러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둔화되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의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짐.
  - 2008년 KOSPI 2000을 향해 달리던 한국 증시는 1000이하로 곤두박질쳤으며 그 주요 원인은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이었음
    - 8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전년도의 10조 8천억원보다 많은 13조 9천억원으로 8월에만 전체 60%을 넘는 8조 7천억원이 유출되면서 급락함
  - 이러한 금융부문의 극심한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침체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져옴.
    - 2008년 4분기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 다. 역대정권 1년차 경제성과 비교

<표 4-3> 새 정부의 출범 당시 경제지표 비교

| 구 분                       | 김영삼 정부         |                | 김대중 정부         |                 | 노무현 정부          |                 | 이명박 정부          |                 |
|---------------------------|----------------|----------------|----------------|-----------------|-----------------|-----------------|-----------------|-----------------|
|                           | 1992           | 1993           | 1997           | 1998            | 2002            | 2003            | 2007            | 2008            |
| 연도<br>(12월말기준)            |                |                |                |                 |                 |                 |                 |                 |
| 성장률(%)                    | 5.9            | 6.1            | 4.7            | -6.9            | 7.0             | 3.1             | 5.0             | 2.5             |
| 실업률(%)                    | 2.6            | 2.7            | 3.1            | 8.0             | 3.1             | 3.8             | 3.1             | 3.3             |
| 주가지수<br>(92/93은 12월평균)    | 620.0          | 802.0          | 376.31         | 562.46          | 627.55          | 810.71          | 1897.1          | 1124.5          |
| 물가상승률<br>(전년비,%)          | 6.2            | 4.8            | 4.4            | 7.5             | 2.8             | 3.5             | 2.5             | 4.7             |
| 환율(원)-증가                  | 788.6          | 809.25         | 1,499.38       | 1,211.5         | 1207.4          | 1,191.9         | 930.76          | 1,368.8         |
| 이자율<br>콜금리(연리%)           | 13.52          | 11.55          | 21.58          | 6.96            | 4.33            | 3.79            | 4.99            | 3.27            |
| 통합재정수지(조원)<br>(GDP대비비중,%) | △1.7<br>(△0.7) | 0.8<br>(0.3)   | △6.9<br>(△1.5) | △18.8<br>(△4.2) | 22.7<br>(3.8)   | 8.1<br>(1.5)    | 33.8<br>(3.7)   | △11.0<br>(△1.1) |
| 국가채무(조원)<br>(GDP대비비중,%)   | 30.9<br>(12.0) | 32.8<br>(11.3) | 60.3<br>(12.3) | 80.4<br>(16.6)  | 133.6<br>(19.5) | 165.7<br>(22.9) | 289.1<br>(32.1) | 317.1<br>(32.7) |

출처: 통계청(KOSIS),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권 1년차의 경우에만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다른 정부는 취임 1년 후 모두 성장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다음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취임 후 성장률이 약 4% 포인트 감소하여 비교적 큰 폭의 성장률 추락을 나타냄.
  -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차인 2008년 하반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2.5% 포인트 감소한 2.5%가 됨.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은 분배우선과 반기업 정서 등의 정책기조로 세계경제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침체를 야기했음.

□ 실업률의 경우 새 정부 취임 1년 후 모두 상승

- 외환위기로 여파로 인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실업률이 3.1에서 8.0으로 4.9%p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실업률이 0.1~0.2% 포인트 증가에 비해, 노무현정부의 출범 후 실업률은 0.7%포인트 증가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업률의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냄.

□ 주가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권 취임 1년 후 모두 상승

- 김대중 정부 취임 후 주가 상승률이 약 4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당시 2007년 12월 2000포인트를 바라봤던 주가지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외국투자자의 유출로 2008년 12월말 기준 1000포인트 초반대로 약 40% 하락

□ 물가상승률은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취임 1년 후 모두 상승했는데,

-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약 1.4% 포인트 하락하여 4.8%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1991년 이후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외환위기로 물가상승률은 3.1포인트 증가한 7.5%로 큰 폭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냄.
-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노무현정부시에는 0.7포인트 증가한 3.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인상으로 무려 2.2포인트나 증가한 4.7%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냄.

□ 환율이 비교적 낮았던 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 정부 출범 후에 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해외자금의 유출과 함께 1달러당 1,000원 미만이었던 환율이 1,300원대로 크게 상승함.

-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는 초기 1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은 1,200원대로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
- 이자율은 콜금리를 기준으로 정권 취임 1년 후 모두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는데, 김대중 정부 초기 21%를 넘는 금리가, 취임 1년 후 약 14% 포인트 하락하여 6%대로 크게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 1년 후 콜금리 하락률은 약 12%로 다른 정부의 하락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이명박 정부는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는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악화되었음
- 특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활용한 김대중 정부 초기 1년의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약12조원이 증가하였음.
- 외환위기 극복 이후 세계 경제호황에 따라 세수증대로부터 재정수지가 상당부분 개선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년만에 통합재정수지가 약 15조원이 감소함으로써 큰 정부의 전형을 보여주었음.
- 이명박 정부 또한 이러한 큰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증세기조로 인한 재정수지 흑자폭의 증대로 출발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의해 1년만에 상당한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였음.
-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절대금액 및 GDP 대비 비중 측면에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 김대중 정부 1년 후 국가채무는 약 20조원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비중도 4.3%포인트 증가하였음.

-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후 GDP대비 국가채무는 20%를 넘었으며, 국가채무 절대금액은 32.1조원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30%가 넘었으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출범 1년간 국가채무수준을 안정화시켰음.

## 라. 역대정권 1년차 사회지표 비교

-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의 경우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후의 지니계수 상승 폭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금 낮아지면서 양극화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하지만 1990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 정부 출범 1년 후 상대 빈곤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후의 빈곤율 증가율이 2.9%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1997~1998년 동안의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분배구조가 악화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음.

<표 4-4> 새 정부의 출범 당시 사회지표 비교

| 구 분         | 김영삼 정부 |       | 김대중 정부 |       | 노무현 정부 |       | 이명박 정부 |      |
|-------------|--------|-------|--------|-------|--------|-------|--------|------|
|             | 92     | 93    | 97     | 98    | 02     | 03    | 07     | 08   |
| Gini계수      | 0.256  | 0.269 | 0.268  | 0.295 | 0.298  | 0.295 | 0.324  | -    |
| 상대적 빈곤율(%)  | 8.0    | 9.0   | 9.3    | 12.2  | 11.4   | 12.8  | 15.6   | -    |
| 고령화지수 (백명당) | 21.7   | 22.7  | 28.6   | 30.4  | 38.1   | 41.3  | 55.1   | 59.3 |
| 출산율(명)      | 1.78   | 1.67  | 1.54   | 1.47  | 1.17   | 1.19  | 1.26   | -    |

출처: 통계청(KOSIS), 2008년의 지수는 미발표되어 포함하지 않음.

주 : Gini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도시가구 (1인 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산출된 값임. 고령화 지수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로 계산된 값임.

□ 고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음

○ 고령화지수의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2~2003년 약 8.4% 증가로 증가폭이 가장 큼.

□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노무현 정부 초기의 출산율은 출범 1년째인 다음해에 약 0.02명 증가함.

## 2.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가. 역대정권 정책기조와 1년차 추진개혁과제

#### 1) 김영삼 정부

□ 김영삼 정부는 그 동안 누적된 경제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해 과거 개발 년대에 우리 경제의 발전원동력이 되었던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함.

- 이에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제반정책을 추진함
- 「신경제 5개년계획」 하에서 금융·재정·행정규제 등 각 부문의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
  - 금융실명제와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했고, 재정지출구조 개편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 아울러 3차에 걸친 행정규제완화작업과 함께 공정경쟁질서의 개선과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등도 마련함
  - 또한 APEC 정상회담, UR협상 타결 등으로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금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짐
- 한편, 신경제 건설의 첫걸음으로서 향후 5년간 신경제 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아래 김영삼 정부 출범초에 「신경제 100일 계획」은 5개년 계획의 전략으로 추진됨.
- 신경제 100일 계획은 경기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계개선, 기본생활품 가격의 안정, 공직자 의식개혁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물가-임금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주력함.

## 2)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는 우리 경제의 오랫동안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과제와 함께 출범
  - 금융·기업·정부·노동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신설하여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 및 퇴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함.
- 기업구조조정은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기업의 설정,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 5대과제」를 합의하고 10개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 노사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고용조정제를 도입하였음.
-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공기업의 축소개편 인원감축 또는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 봉급 삭감하여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함.

### 3) 노무현 정부

□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벌개혁 추진

- 노동편향적인 경제논리는 노동경직성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불법노사분규를 엄단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음.
- 이러한 기업 환경 악화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노무현 정부 1년만에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공동화 우려 속에 한국을 떠나는 공장이 급증함.

□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즉, 중산층 육성을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전해주는 재분배만을 추구함.

#### 4)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의 평가

-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시장자유주의 정책 실시
  - 노무현 정부의 분배 우선과는 달리 성장에 비중을 두어,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이루고자함.
  - 인수위 시절부터 감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정권 출범 후 법인세 부담 완화,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친기업 정책, 부자 감세라는 여론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감세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시각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 작은 정부를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공기업의 혁신을 강화를 위한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의 민영화 개혁안을 마련하고, 규제완화 등이 추진됨.
  - 그러나, 아직은 외형상의 조직개편일 뿐이며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커서 추진 상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경향이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업인 대운하 건설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으나, 사업적합성 등의 문제로 보류됨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음.



## 가. 활기찬 경제 관련 100대 과제 평가

### 1) 목표달성이 우수분야

-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37.7%, 못하는 편이 62.3%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4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40.4%, 고졸에서는 37.4%, 대졸이상에서는 37.6%로 중졸 이하의 고령자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 활성화는 경제성장과 경기 진작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 하였으며,
  -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수단과 목표가 적절히 연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목표달성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하지만, 정부의 100대과제에는 법인세 부담완화, R&D 세제지원, 기업 상속 공제금액 확대 등 법인 관련 세부담 완화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 소비 진작에 매우 중요한 개인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정책내용이 빠져 있음.
-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 이 과제는 금융규제 개혁의 내용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 금산분리완화만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한국 금융산업의 선진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실제 내용은 산업은행 중에서 민간부분과 경쟁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 매각인바, 마치 산업은행 전체의 민영화로 오인되고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은 또한 2008년 하반기 발생한 미국투자은행들의 몰락과 더불어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둘러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00대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 금융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금융감독의 선진화, 금융관련 정부조직의 합리화 등의 이슈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34.0%, 못하는 편이 66.0%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체순위에서 10개중 5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달리 보통으로 평가
  - 특히 응답자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거주자는 ‘잘하는 편이다.’가 42.4%, 40.4%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기타지역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 하도록 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으로 규제를 줄이겠다는 단선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일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이익의 지방 환류 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

- '과제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 경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경상수지 안정, 원화의 국제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이러한 전략과 정책목표는 서로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시의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에서의 신속한 인식과 예산안 통과가 필요함.
  -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의회 대응의 신속성은 보통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과제 26. 규제제도와 법령을 선진화 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33.9%, 못하는 편이 66.1%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전체순위에서 10개중 6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21.3%, 고졸에서는 35.2%, 대졸이상에서는 34.2%로 고학력층에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 전략적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국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제로 이제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6개월 자체 평가에서도 규제영향분석,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 제도들이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음(2008년 10월 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 결과자료 보도자료).
  -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에만 집중하여 강화되어야 할 규제(예를 들어 기업투명성 강화관련, 환경관련, 공정경쟁 관련)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조차 없음.
-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 독과점 폐해를 막아서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목표는 일견 타당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으나,
  - 경제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독과점의 필요성이 용납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아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보다 적절한 목표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강화 내역, 기업간 불공정경쟁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처 방안, 기업합병 심사시 효율성제고와 독과점력 강화의 균형 고려 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함.
-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산업 개척”과 3개의 세부 과제와는 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 현재 제시되어 있는 세부 과제들은 에너지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제시된 3개의 세부과제들은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평가됨.
  - 또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의 과도한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중장기적 조정 문제는 본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포함시킬 필요 있음.
-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30.1%, 못하는 편이 69.9%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8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종사자는 ‘잘하는 편이다’가 36.4%, 자영업종사자는 35.9%, 블루칼라종사자는 30.0%로, 그리고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29.6%가 응답하여 농림어업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 지금까지의 농정 목표와는 달리 수익산업으로 농림어업을 전환시키겠다는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 평가받을만함.
  - 그리고 이를 위해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식품산업 육성, 그리고 금융 중개위주의 농협과 수협활동을 농·수협 본연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추진의 중간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게 과제가 진행되었음.

□ '과제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운다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을 돌아볼 때 적절한 목표라고 판단되며,
-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융, 관광, 의료, 지식기반서비스, 전시 등의 서비스 산업들을 열거한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임.
- 하지만, 각 과제들간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이지 진정 목표인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거나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특히 국정과제로 내세운 제약 및 의료기 산업 육성, 관광진흥 기능의 민간주도 개편 등은 사실상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과제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27.3%, 못하는 편이 72.7%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10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달리 가장 낮은 지지를 보임.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잘하는 편이다.'가 34.0%, 고졸에서는 26.0%, 대졸이상에서는 27.4%로 고학력일수록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최근의 방송법개정과 관련된 대립을 통해 부정적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이런 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도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일하여 왔음.

- 그러므로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고,
- 다양한 부분에 백화점식으로 열거된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 이를 성공시켜서 그 성과가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과제의 선정과 함께 세부적인 전략실천이 필요함.

### 3)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

-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잘하는 편 27.4%, 못하는 편이 72.6%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 전체 순위에서 10개 중 9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은 ‘잘하는 편이다’가 32.0%, 블루칼라는 25.63%, 화이트칼라는 27.5%로 직업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층에서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
  - 세계적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내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대립이 예상되고,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다양한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 경주는 시의적절함.
  -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그룹 간의 참여한 대립이 예상됨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대안 제시가 없음.
  -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형식적 측면이 강하며, 실제로 회의체 운영실적은 있으나, 그간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 도출과 정책개선 실적이 거의 없음.

□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합리적이며 시의성 높은 정책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 고급 인력 양성, 국내 사업 환경 개선 등 여러 관련 여건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 관건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전략과 실행이 필요함.

□ '과제 25.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31.6%, 못하는 편이 68.4%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10개중 7위를 차지하여 전문가 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29.8%, 고졸에서는 35.2%, 대졸 이상에서는 30.4%로 중졸 이하의 고령자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기 침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통해 대폭 증가하여 지원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한계기업을 포함한 경기침체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로 범위가 확대됨.
-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 이러한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과제 28.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을 예고하고 있음.
- 또한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업 규제완화, 수요자 중심으로 전과이용 규제 완화,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나, 통신과 방송융합시대에 어떻게 양자의 융합을 통해 국가의 통신, 방송사업의 경쟁력 극대화를 추진하겠다는 큰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통방융합시대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사익성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 공영방송의 정의와 위상 재정립문제(사장인선 포함, 편집권의 독립 등)에 대한 과제가 누락되어 있음.

□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45.1%, 못하는 편이 54.9%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1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40.4%, 고졸에서는 45.4%, 대졸이상에서는 45.2%로 고학력일수록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국내외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시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과제의 수가 너무 많고 초점이 분명치 않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여론 흐름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녹색뉴딜(50조, 96만명 일자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음.
  - 즉, “녹색”과 “일자리” 중에 어느 것에 강조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임. 특히 96%의 일자리가 건설 및 단순 근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인가에 대해 확신이 가지 않는 분위기임.
  - 2009년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가 악화되면서 녹색성장의 전략 및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은 부족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40.8%, 못하는 편이 59.2%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3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38.3%, 고졸에서는 39.6%, 대졸이상에서는 41.4%로 고학력일수록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에너지 자주 개발율과 녹색성장이 얼마나 높은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녹색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현재 제시되어 있는 5개의 세부과제 중 극히 일부만이 이미 시행완료된 사업이고, 원자력비중 제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은 부족한 분야로

- 전략과 과제 간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는 단기기간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과제임.
- 물론 원천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은 목표달성은 전혀 안된 분야로

- 녹색 한반도라는 과제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여 그 자체로는 평가가 힘든 것이 사실임.
- 다만 세부과제 중 일부는 시의적절하나 하천종합정비 사업은 그 자체로서 녹색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자칫하면 대규모 토목사업이 포함된 “회색사업”으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대운하 논쟁의 기억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과제이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투명한 내용공개가 필요할 것임.

□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은 부족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나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잘하는 편 43.9%, 못하는 편이 56.1%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 10개중 2위를 차지하여 전문가평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특히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잘하는 편이다.’가 42.6%, 고졸에서는 45.1%, 대졸이상에서는 43.5%로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대부분이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 그런데 미래전략산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차세대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들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열거한 내용들의 과제로 그러한 미래전략산업들에 대한 육성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며,
  - 소위 우리나라의 장래에 필요한 산업들과 국제표준에 대한 입지의 선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비어있는 상황이며,
  - 오히려 이런 막연하고 내용이 모호한 과제들보다는 구체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됨.
-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은 부족한 분야로
- 국토를 개방형으로 조성하는 목표를 가진 국정과제의 수행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타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한 과제들이 과연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를 위해서 필수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한 국토균형개발 계획이 실패한 것은 인기영합적으로 정부의 예산과 자원을 모든 국토에 1/n 방식으로 나누어 주고 구호만 균형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재 가장 성공적인 부문에 재원과 자원을 집중하는 창조적인 정책적 선택전략에 더 근접하는 과제가 선정되어야함.

## 다. 능동적 복지에서의 과제평가

### 1)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

-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제로 바꾸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 평생복지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의 확보와 사각지대의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보편성 있는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본 과제는 평생복지기반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와 잘 부합되고 있음.
  - 1개의 장기과제와 3개의 단기과제를 세부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매우 합리적임.
  -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로서 시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 ‘과제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제 비교상 낮은 편이며, 특히 중증질환 및 예방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고 비급여 항목도 많은 편임.
  -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평생복지기반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임.
  -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출산전후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와 중증질환 등 국민건강안전망 효율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과제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수요가 큰 암 등 중증질환 및 출산관리를 표적화한 것으로 정책목표와의 방향성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됨.

□ '과제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은 국민건강 증진의 차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투자로 간주
- 따라서 평생복지기반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과제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초안정망을 구현하겠습니다.'도 목표 달성도가 우수한 분야로

-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반 마련이라는 전략 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과제 선정은 적절하며, 전략과 과제간의 연계성은 높게 설정됨.
- 그러나, 본 과제의 세부 추진사항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과제의 중요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의 과제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과제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분야로

-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 증대, 여성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증대, 저출산, 양육비용 증대, 미래 인력에의 투자 등으로 가정의 보육지원 강화 필요성을 더욱 더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이며 시의성 높음.
- 하지만, 보육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의 연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정책방안은 제시는 누락됨.

□ '과제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도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분야로

-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선정과제의 합리성 및 시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며,
- 대부분의 과제들이 단기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인바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7.1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도 장기적인 추진계획 하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과제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분야로

- 고용지원서비스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고용정보 수요의 증대에 따라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 고용지원서비스 조직의 인력, 내부 조직구성, 서비스 질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적절함.
- 노무현 정부 시 발표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용 시스템 개선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음.

□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우수한 분야로

-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성과중심의 능력개발 재정지원,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등 정책 개선 노력은 시의적절함.

-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가장 큰 작동 기제인 훈련비용 지원 체계에 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고등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기술계 학원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지 못함.
- 국가기간산업, 인력부족 직종의 기능숙련인력 공급을 위한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직종개편 및 개선 방안 추진, 훈련공모제 운영을 통한 지역특화 직종 인력 공급 등은 시도는 좋았으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개선이 필요함.

□ ‘과제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분야로

-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부족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 모색은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 관계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현재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 작업이 필요함.

## 2) 목표달성이 보통인 분야

□ ‘과제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보통으로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 외의 수단을 찾기는 어려울 것임.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과제들 이외에도 진료비 지불제도개선, 약제비 절감, 중증질환 중심 수가체계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 제도개혁은 이해단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많은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를 강력한 추진의지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과제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미래 인력의 개발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나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나 사회적 환경이 취약하여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과제로 시의성은 적절하지만,
  - 아동과 청소년 분야의 통합에 따른 전반적 시스템 개선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미흡함.
  
-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경제적 위기, 다양한 가족의 출현,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가 등으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가정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및 도입 노력은 적절하며 정책개선노력은 시의적절하지만,
  - 부처 내 사업에 머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국가유공자가 존중 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 통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 있고, 장애인 연금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

- 따라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과제 선정은 적절하며, 전략과 과제간의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08~2009년에 집중 배치된 것은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2010~2012년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의 내용이 구성되지 않음.
  - 저소득층 및 서민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과제의 세부 추진사항은 지나치게 교통통신과 연료비 등 서민생활의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 주거비, 의료비, 사교육비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보완이 필요함.
- '과제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과제 선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략의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는 주로 금융 소외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과제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의 경우도 목표달성은 보통으로
- 사회서비스 확충은 국민의 기초적, 필수적 삶의 영역에 대한 욕구 증가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로서 과제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설정된 세부 추진과제는 사회투자형 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사회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제공분야 및 수준, 정책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수립 필요

### 3)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

□ ‘과제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는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전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필수적이므로 과제 선정은 적절하며, 전략과 과제간의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단기간에 추진될 수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세부 추진과제가 주택공급, 세제완화 및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형태 및 주거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영역
-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제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도 목표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TA/DDA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거주여건을 개선과 관련하여 과제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서민생활과 주거안정이라는 전략과의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가 소득감소를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업 경영혁신,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시스템 구축하고,

- 기존의 농업직불금 제도는 투명하게 재정비하고,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조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제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는 목표 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파트타임, 재택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 현상으로 여성 및 취약계층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적절함.
  - 각 계층 및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 제공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안정고용,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정책소외·한계계층으로 실업과 빈곤 상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부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 ‘과제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는 목표 달성이 부족한 분야로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관련 과제의 추진은 시의적절함.
  - 단기, 임기응변적인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적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 보호, 특혜 차원의 능력개발제도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능력개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

#### 가. 위기극복 경제대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전기 대비 5.6%)했다고 발표
  - 이처럼 실질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4분기(-6%) 이후 처음이며, 제2차 오일쇼크 영향에 따라 1980년 -1.5%를 기록한 이후 세 번째로 기록될 전망
  - 이밖에 전년 동기대비 수출 11.5%, 투자 14%, 그리고 소비 4.4%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와 원화가치 하락폭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고, 실물경제위기도 보다 빨리 보다 큰 폭으로 영향을 받음.
  - 우리 경제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1%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부터 본격화될 세계경제 침체로 입게 될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금융과 외환부문 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과 외환 위기를 유발하는 최악의 악순환 방지해야 할 것임. 또한 제2의 세계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보호무역기조가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신속한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 따라서 신속하면서 실효성 높지 정책대응이 요구됨.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원칙
  -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 구축
  -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원-

윈(win-win) 정책과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구인효과(crowd-in effect) 극대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할 것임.

○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짜야함.

⇒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정책조합들마저 검토해보는 특단의 노력 필요

⇒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것도 그 한 가지 예이며, 재정 확대라는 대세에 편승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라는 것임.

○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단호함 필요

⇒ 경쟁력이 없는 시장에서의 낙오자까지 지원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곤란

○ 시행된 정책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관성 유지에 힘써야함

⇒ 지금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4년 후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선택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인내가 필요

⇒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공공 부문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고, 필요하다고 확신이 선 공공부문 개혁은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

## 나. 재정정책의 실효성 증대 방안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은 모든 시기와 모든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기(과제2)는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확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즉,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정책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실시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은 적합할 것임.

□ 현재 재정정책 기조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첫째, 경기침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둘째, 사회간접자본 분야 내에서도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사업의 조기 완공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재정지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장치들(예: 예비타당성조사)을 재정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무력화 시키면 안 될 것임.

□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증가되어도 중장기적으로 이를 다시 축소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재정지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는 감세와 지출확대가 병행된 상태에서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감안할 경우 2010년 이후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재정정책의 원칙

- 재정지출 확대 원칙 수립

⇒ 무조건 늘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가장 큰 부분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즉, 투자를 유인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감세와 지출 확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

⇒ 소비성향이 더 큰 서민들을 위한 세금환급금이나 쿠폰지급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재정지출 확대가 작은 정부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됨.
  - ⇒ 낭비요인이 심하고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을 바로잡고 축소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강도 또한 약해져서는 안됨.
- 부실부분에 재정자금이나 보증이 제공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사후관리 근거마련 선행
  - ⇒ 더 이상의 재정자금 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철저한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임.
- 지출 실효성 제고
  - ⇒ 복지-일자리-중소기업-농업 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제때에 정책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 ⇒ 예산의 규모보다 복지프로그램 각각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 즉,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바우처제도, BTL, 용자사업 등 예산지출방법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

□ 재정건전성 유지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재정운용 과제

- 중기재정 운용의 활성화
- 공공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기금 및 준조세 정비
- 국가채무의 범위와 추계 및 관리 강화
- 추경편성의 기준마련(필요성, 규모, 분야) 및 실효성 증대
- 재정책대로 인한 제도신설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중복성과 낭비성 사전방지
- 복지예산-중소기업예산-농업예산의 평가체제 구축과 실효성 제고



## 다. 경제정책 과제와 전략

### 1)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방안

- 기존의 정부 재정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함
  - 현재의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급격한 유동성 위축에 도산의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 여력 확보가 필요. 이를 위해 추경예산의 조기편성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이 지속될 경우 정부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그러나, 2008년을 되돌아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이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의 정책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결과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체계성이 낮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함과 지원의 원칙이 불명확함에 기인하고 있음
  - 경기가 안정된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원칙-정책-실행체제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과제 25)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들의 통합과 창구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 체계 구축
-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할 것임. 즉, 중소기업 정책을 소득보전 정책으로 오인하여서는 안 될 것임.

## 2) 규제 완화 방안 및 과제

- 규제 제도와 법령의 선진화(과제 26)는 전략적 규제 개혁을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 및 법령 선진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만 강조될 경우 역작용이 우려되므로 강화되어야 할 규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요구됨.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가 친기업으로만 이해되는 상황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함.
- 규제절차 매뉴얼이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에만 집중할 뿐 보다 강화되어야 할 규제(예: 기업 투명성 강화, 환경관련, 공정경쟁 관련)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조차 없는 실정임.
- 규제완화의 개념은 여전히 규제완화의 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양적인 규제의 수보다는 규제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중요한 규제와 중요성이 덜한 규제를 구분하여 선후 과제를 구별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법령이나 규정 등의 존재여부의 타당성검토 방식을 탈피하여 행위에 대한 일관접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환경관련법, 산업관련법, 토지이용법 등의 개별 접근보다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라는 행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3) 한국형 뉴딜 정책의 과제

- 정부는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에 2009년 총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함으로써 79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조7000억원)와 복구비(연 4조2000억원)를 줄이고, 19만명의 고용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전형적인 토목사업으로 당장의 건설경기 회복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작을 수 있음. 지금까지 파악된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축업이 18인데 반해 토목은 16정도이며, 이 수치는 교육서비스 23, 도소매 25, 사회복지사업 3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그래서 4대강 살리기가 우리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려면 우선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즉, 4대강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당 지자체는 연관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존 사업들 재검토
  -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4대강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해야함.
  - 이처럼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 4대강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음.

### 4)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수회복을 위한 쿠폰(coupon)제 도입

-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진작이 중요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세계경제침체로 수출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내수진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따라서 감세와 재정확대 이외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세금환급(tax rebate)과 쿠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을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로 할 경우 기대이상의 내수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현재 워낙 내수가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 있고 또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지난해 시행된 유류환급금의 경우, 10조 5천억 원의 세금환급액을 기준으로 2.1조원에서 2.5조원의 소비증대 효과와 GDP 증가를 추정한 바 있음.

##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가. 복지과제와 전략

- 능동적 복지를 위한 과제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회보험 개혁과 다층복지체계 확립
  - ⇒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모색
  - ⇒ 그동안 복지정책은 소외계층들에게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welfare)에서 소외탈출의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workfare),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 오래가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학습복지(learnfasre)로 발전되어 옴. 즉, 사전적 연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외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복지-노동-교육 연계가 강화되어야함.
- 복지재정 확충
  - ⇒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 1단계: 복지예산 중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 → 2단계: 세출구조 개선 → 3단계: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 충족 → 4단계: 정책 조화(policy-mix)를 통한 재원 확보

○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 복지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의 비용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

⇒ 복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

○ 인기영합으로부터의 해방

⇒ 정부는 복지란 단지 돈을 모아 주면 된다는 안이함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나. 사회보험 개혁과 다층복지체계 확립

□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제도의 경우, 기초보장은 국가가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경우는 취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전략으로 그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하던 시스템에서, 국가가 근로를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

□ 지속가능하면서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를 위해(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다층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기초소득보장을 담당하는 1층으로서의 기초연

금과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저축기능을 부각시키는 2층으로서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 2층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적용제외(contract-out)제도 도입
-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기존에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연금과 연계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가 완성

○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및 노조대표를 대거 참여시켜 개혁의지가 약화되고 기득권 보호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됨.

-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조정 과정에서 급여수준의 추가인하 및 경과조치 개선 등 보다 합리적 개혁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

□ 질병의 예방 및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립,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또한 건강보험 역시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공적의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기초보장과 추가보장으로 이원화

○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공동추진체계가 필요하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평가하여 적정급여-적정부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우선, 의료보장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필요. 그리고 보충적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보험의 재정적 위험 경감

○ 이와 같은 사보험이 공보험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 분야 효율화의 결정적인 기반 제공

- 선진국들이 취급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다층화에 성공한 사례를 검토하여, 현재 산재보험이 갖고 있는 산재발생방지 유인체계 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급기관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취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업 스스로 하고자 하는 유인기능 내재화
  - 재해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경쟁체계 도입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책임지고 기초보장의 추가적인 부분은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취급기관을 다원화하는 이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적 다층화와 함께 행정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험 관리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효율화
  - 사회보험의 경우 부과-징수-급여라는 행정과정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하고 나아가 급여업무 또한 단일화하는 것도 검토. 즉, 급여기관의 단일화를 통한 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는 것임.
  -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조사 및 징수 등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 자영자의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이 맡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
  - 사회보험 행정업무(부과-징수-급여)를 통합하고, 이를 담당할 사회보장청을 설립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모색
- 다층적 복지체계의 공급주체로는 가족과 국가에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성하고 공공 및 민간 참여로 복지 공급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의 점진적·단계적·사전적 준비작업 필요

## 다.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 지속가능복지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welfare)에서 소외탈출의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workfare)로,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 오래가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학습복지(learn fare)로 발전
  - 일하는 복지와 학습복지는 복지-노동-교육의 삼자의 연계를 통해 가능함. 즉, 복지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을 상호 연계 하에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 간에 연계성이나 사업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수혜적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와 학습복지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같은 사회복지체계의 연계성 결여로 인하여 복지행정의 중복과 관리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지만 수혜적 복지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일하는 복지와 학습복지의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보호’하는 ‘교육-노동-복지’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이 중요.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민간운영이나 복지재정 확충에의 민간참여 그리고 기업복지의 확충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보다 중요하게는 소외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복지-노동-교육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즉,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 직업내 On the job training의 강화, 이에 대한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함. 이러한 사전적 연계시스템은 소외발생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한 시점에서의 복지가 아닌 평생복지-평생학습-평생고용체계 구축의 기초가 되어야함. 즉, 유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동안 보육, 교육, 노동, 고용, 직업훈련,



사회보험, 노후소득보장, 노인복지 등과 같은 평생복지-평생학습-평생고용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

- 특히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략과제별, 전략 과제간의 「수행과정 평가 및 향후 추진여부 판별 후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농어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개별 전략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47)은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 초기부터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및 제대 군인 취업(과제 50.)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개편될 사회복지전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연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농어가 소득 증진 및 농어촌 거주여건 개선(과제 55)은 FTA 비준 등 농어촌 지역경제 및 농어가 소득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보건복지정책 인프라 구축 등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
  - 여성과 고용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제 58)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적합한 양질의 훈련기회 제공, 여성인력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요구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과제 59.)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능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즉, 비정규직 근로자 목표집단별로 특성화된 접근방안 및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함.

## 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과제 및 전략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조세부담률이 복지혜택이 큰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확충은 궁극적으로 조세부담률의 제고로 달성될 수 있음.
  - 그러나 조세부담률 제고를 통한 재원 확충은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통한 재원확충에도 부족한 재원이 있을 경우에도 제한해야함. 다시 말해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을 근거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재원조달을 해야함.
-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복지재원 확충전략의 첫 단계로서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원 확충
  - 기존의 복지제도 운용에 있어 지출 효율화 방안과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 각 사회복지 부문별 중복지출 요인을 제거하고 복지 행정체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지출감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두 번째 재원확충 단계는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해 가능
  -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
  - 기존 예산 중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고, 예산 구조개혁을 통해 경직성 예산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단계는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 충족으로부터의 실질적 재원확충 가능

-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조세제도(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합리화함으로써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수요를 사전에 충족
  - 교육제도의 개혁의 경우 분배구조 개선과 빈곤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며, 직업훈련 및 재취업교육 등 고용정책의 개선은 실업, 빈곤, 그리고 분배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음.
  -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지-노동-교육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고용보험제도에서의 직업훈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 등을 통합관리
- 넷째 재원확보 단계는 정책조화(policy-mix)를 통해 가능
- 유사한 목적을 갖고 기능을 갖는 각종 정책들을 조화시킴으로써 복지확충의 시너지 효과 발휘

#### 마. 복지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 복지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의 비용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
- 제도도입 이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도입 이후에는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함.
  - 사후평가는 「사전적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사업 사후평가 → 추후 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이라는 예산과정의 하나로 자리잡게해서 복지실효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임.
  - 일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사업의 개요와 함께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사업의 경제성, 기대효과, 파급효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이 사전적 관점에서 정리되어야함.

- 복지제도의 사전·사후 평가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개발 및 수집, 실제 평가시행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해져야함.
- 복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임
  - 사후평가 결과를 지속사업의 사전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환류체계 (feedback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평가를 과학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의 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
  -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통해 시기별로 변화하는 각종 정책, 그리고 정책혼합(policy-mix)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임.

## 바. 인기영합으로부터의 해방

- 이명박 정부는 복지란 단지 돈을 모아주면 된다는 안이함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할 것임
  - 복지를 바로 보는 새로운 시각은 누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서, 이를 제때 제대로 전달하고자 고민할 때 완성되는 것임. 그래야 지속가능 복지가 만들어지는 것임.
- 지속가능 복지에 입각한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경제학적 분석은 필수적
  - 경제학은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인데, 선택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 못한 채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훗날 크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됨. 이런 대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기영합이자 정치왜곡임.

- 어떤 정책이 좋은가를 평가하려면 그 정책이 실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함. 이 정책을 실시하면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서부터 그 대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게 될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적 분석임.
  
- 정책의 파급효과를 짚어보기도 전에 미리 이 정책의 성격이 보수니 진보니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인기영합주의와 정치왜곡의 전형임. 따라서 차기정부가 구체적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인기영합과 정치적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  
정부 및 외교안보 분야**





# V. 1년 국정 평가 및 향후 정책제안:

## 정부 및 외교안보 분야

### 1. 이명박 정부 1년 국정 평가: 정부 부문

#### 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

##### 1) 출범 당시 '정부 부문' 정책수립의 환경

- '대부처 및 대국주의'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았고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강도 높은 행정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나름대로 확보된 상태였음.
- 외형적인 구조개혁은 물론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 친화적 정부 부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음.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음.
- 정권 출범 초기 '작은 정부'의 지향과 함께 정부예산을 아끼고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정권의 정체성이 경제성장이 있었던 관계로 뉴라이트의 이념과 부합하는 '작은 정부'가 경제성장의 거시적 목표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됨.
-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지방의 경쟁력과 중앙의 경쟁력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되어 있었음.
- 법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저하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적인 법질서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었음.
- 일부 사안에 있어서 언론이 사회 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 분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음.

-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여성 및 아동의 안전 보장, 식생활 선진화 등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음.

## 2) 지난 1년간 ‘정부 부문’ 정책 관련 환경 변화

### □ 대내적 환경 변화

- 법질서 확립을 통한 근본적인 사회질서 수립이라는 원칙에는 동의 하지만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인터넷 윤리’ ‘시위문화 개선’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이 첨예하고 맞서는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공기업 구조개혁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2008년 동안 집권세력이 개혁 드라이브 주도권을 잠시 상실하면서 공기업 구조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겨남. 일부 국민들은 공기업 구조개혁을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언론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들을 옹호하거나 혹은 특정 언론사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빚은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부의 관점에서 불리한 여건의 조성으로 이해됨.

### □ 대외적 환경 변화

- 2008년 9월을 기점으로 미국 발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설정한 각종 개혁 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 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정부재정 규모축소를 통한 ‘알뜰한 정부 운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음. 물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 재정적자 해소 노력과는 별도의 문제임.

- 재정지출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문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관리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고려가 요구되었음. 특히 작금의 경제위기는 2009년 이후의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성공적인 재정관리라는 국가과제는 국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
-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경우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체로 5%~10% 수준의 예산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나. ‘정부 부문’ 국정 평가

### 1) 전략 1(과제 1~5):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공공 영역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과제선정이었다고 평가됨. 다만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간의 연계가 명확치 못한 측면이 있음.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국세행정 선진화’는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과제와 연결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방만한 경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과제선정은(과제 2) 적절한 판단이었음.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각종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과제 선정에 좀 더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과제 선정(과제 3)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의 ‘제도개선’에만 목표를 집중한 나머지 ‘성과’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지적됨.
-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감사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중요한 국정과제로(과제 4) 삼았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합리성과 시의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함.

- 정부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임. 따라서 정부의 경쟁력이란 공무원들의 능력과 동기부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국정과제는 (과제 5) 정책목표의 합리성과 시의성에 적절하였음. 다만,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성과관리나 채용시스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한계로 평가됨.

#### □ 1년 과제수행 평가

- 취임과 동시에 2008년 2월 27일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종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등 모두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등 45개 기관으로 감축(과제 1). 이어서 4차에 걸친 공공기간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고 여타 공공기간의 감축인원 및 재무건전성 계획을 지시한 바 있음(과제 1).
- 하지만 공공기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당초 개혁 대상의 1/3 정도 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셌음. 그리고 IT 강국답게 전자정부분야를 선도하고자 밝혔음(과제 1).
- 예산절감의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과제 2). ‘국가채무 관리계획’ 수립 통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됨(과제 2).
- 공공부문 성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심사평가심의관 1,2실에서 정책분석 평가실로 개편하였고,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며,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도 종전에 비해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과제 3).
- 내실 있는 감사, 투명한 정부(과제 4)와 관련하여 모든 세부실천과제가 2008년을 넘어서는 장기과제에 해당함. 다만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업무추진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공무원의 경쟁력과 관련하여(과제 5) ‘성과’와 ‘보직관리’간 연계 강화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 2) 전략 2(과제 6~10):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비록 공론화의 과정이 결여되었지만 행정비용 낭비의 제거와 동시에 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과제선정으로 평가됨(과제 6).
-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또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중앙-지방 격차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매우 시의성 높은 과제선정으로 평가할 만 함(과제 7).
- 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하지만 공론화 시스템이 부족했던 관계로 해당 과제가 제시된 이후 사회적 갈등의 계기를 제공하였음(과제 8). 또한 광역경제권 구축의 근거로 선진국 사례를 들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가 어떻게 한국적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한 상황임.
- 지방재원 확충을 목표로 한 과제선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과제 9).
- 지방자치 경찰은 지방 스스로에게 직접적인 ‘지역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중요하게 기여함(과제 10). 개별 지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과제선정이라고 판단됨.

### □ 1년 과제수행 평가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장기과제이므로 2008년 국정평가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과제 6). 관련하여 2009년 이후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 권한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었음(과제 7). 특히, 지방이양 추진기구 설치, 고위 정책협의회 설치, 정비대상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선정원칙 및 정비방향 설정, 2008년 하반기 합동평가 시범실시 등은 대표적인 목표 달성 과제들임. 하지만 조직 및 예산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에 의한 목표달성이 아닌 관계로 진행과정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08년도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광역경제권 구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 되었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7개 광역경제권별로 확정하였음(과제 8). 다만 광역경제권 정책은 논쟁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기능에 대한 고려가 결핍된 것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에 관련된 세부실천과제 모두가 ‘09년이나 ’10년, ’12년까지 추진 되어 할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의 재원 확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돌발적인 목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과제 9).
- 지방경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2008년에 추진해야 할 세부실천과제는 “자치경찰법” 제정인데, 자치경찰법을 제정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음.

### 3) 전략 3(과제 11~15):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정책목표에 따른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략과 과제 간의 부합성과 연계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과제 11). 또한 법질서, 신뢰, 원칙, 정직성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략 과제의 목표와 세부과제는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일부 세부과제, 특히 임기 중 비리·부정에 대한 사면 제한 조치는 법질서의 예외 없는 집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임기 말까지 미루는 것은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

- 공직자 부패척결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규칙 전면정비 등 부패 유발 요인의 근원적 제거”의 경우 다른 세부과제인 정부투명성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투명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 기업의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확산/지원”은 전략과제와 실천과제간의 관련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과제 12). 또한 이미 지난 참여정부에서부터 수행되어왔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
- 언론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과제명은 언론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과제 13).
- 신문법 대체법안의 마련자체가 과제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즉, 규제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의 출현을 통하여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과 경쟁력 제고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6개 중에서 “위키형 포털 드림코리아 구축”은 다른 세부과제와 비교하여 부합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외 과제들은 과제선정이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과제 14).
- 과제 15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이질적인 두 개의 과제를 묶어 놓았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다만 개별 과제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명박 정부 정체성과 정합성을 이룬다는 평가임.
- 과제 15를 두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과제로서 전략과 과제 간의 정합성은 높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세부과제는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여타과제는 그 비중이 낮아 과제간의 비중 차이를 드러냄.

□ 1년 과제수행 평가

- 법질서 관련 거의 모든 세부과제의 추진시한이 현 정부 임기기간으로 설정된 관계로 2008년도 국정과제 수행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과제 11).
-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투명성 평가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전자의 경우 대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진척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과제 12).
-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대체입법 추진이 있었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기구 설립이 추진되었음(과제 13).
- 다음과 같은 총 6개 세부과제에 걸쳐 현재 실천전략이 추진 중에 있음. 대체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상태임은 물론 세부 과제명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측정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과제 14). 대표적으로 “위키형 포털 드림코리아 구축” “갈등관리기반 구축”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능력 배양” “분야별 갈등현안 파악 및 지원” “자율적인 갈등 해결문화 정착 유도·지원” “갈등관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검토” 등임.
-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저작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과제 15).

4) 전략 4 (과제 16~20):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재난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한 세부과제로 1)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2)재난, 재해안전 선진화, 3)사이버 안전으로 구성된 전략과 과제간의 부합성과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됨(과제 16).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실적위주의 목표관리체제하에서 무시된 재난관리 체제를 100대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함.



- 하지만, 재난관리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려우므로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세부과제로 1)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도물 공급체계 구축, 2)환경성 질환예방 및 퇴치, 3)식품안전 강화를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과제가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과제 17).
- 하지만 환경의 안전성, 식품안정성과 관련하여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전 예방하는 방식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필요
-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실적위주의 ‘목표관리’ 체제 하에서 무시되어진 안전한 일터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됨(과제 18). 다만, 안전한 일터조성의 추진시한이 모두 2012년으로 단기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과제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선진사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됨(과제 19).
- 교통사고를 줄이는 과제선정은 선진화의 대표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세부과제 자체가 대단히 획기적인 사안들로 보기 어려움(과제 20).

#### □ 1년 과제수행 평가

- 재난관리체계 통합과 관련하여 대체로 보통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왔고, 본 국정과제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재난의 차원에서 대비하는 인식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과제 16).
- “물, 공기, 먹을거리” 등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경우 국민이 느끼는 개선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과제 17). 특히, 환경성 질환 예방은 국민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그 성과를 단기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일터”의 과제는(과제 18) 국정과제로서 선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매우 보편적인 성격의 과제이며, 어느 누구도 선정의 적절성에 문제 삼기 어려운 내용임.  
다만 현재 과제명의 경우, 다소 추상적인 관계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 운동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정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위의 과제 18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과제 19의 경우 추진 기관과 관련하여 여성부의 역할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 이명박 정부 1년 국정 평가: 외교안보 부문

### 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

#### 1) 출범 당시 ‘외교안보 부문’ 정책수립의 환경

##### □ 대내적 환경

- ‘대북정책-대외정책’의 과도한 상호의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지난 10년간 진보 성향 정부의 결과로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과 우리의 보편적인 대외정책은 적절히 분리되지 못하고 우리의 대외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남북한 관계에 종속되었다는 비판 제기됨.
- 햇볕정책 10년의 결과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었다는 비판 제기. ‘햇볕’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남북한 관계의 경우 ‘햇볕’의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더욱 공격적이고 단절적인 공세를 취하게 만든 경향이 있음.
- 북한과 미국을 이분법적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의 결과로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전통적 한미관계 복원이 기대됨.

- 출범 당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경제성장 요구가 비등한 관계로 경제 외교, 에너지외교 강화를 기대함.

#### □ 대외적 환경

- 부시행정부는 임기 말기를 앞두고 북핵문제 매듭을 위해 과감한 대북 접근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한반도 외적인 요인(중동정책 실패, 2006 중간선거 실패 등)들이 작용한 결과임.
-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인해 우리 역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내외교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교역국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통해 존중받을 수 있는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변국들은 최근 수년간 국방력 강화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군사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와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음. 관련하여 ‘국방개혁 2020’을 둘러싼 관심이 높았음.
- 탈근대적 국제질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복합적 네트워크’ 외교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2) 지난 1년간 ‘외교안보 부문’ 정책 관련 환경 변화

#### □ 대내적 환경 변화

- 남북한 관계 경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남으로 인해 출범 당시 수세적이던 진보진영의 입장이 다시 공세적으로 바뀌는 환경변화가 발생함.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수적인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기초를 반전시킬 만큼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음.

- 상반기 소고기 파동으로 인해 개방 지향의 경제외교(FTA)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음. 하지만, 수입 소고기 문제가 반미감정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국내정치적 사안(대통령 리더십, 경찰의 대응방식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지난 1년간 ‘전략적’ 한미동맹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한미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동맹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한미관계, 남북한 관계, 국방개혁, 경제외교 등 각종 사안마다 사안 자체에 대한 엄격한 분석과 논의보다는 특정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항상 ‘보수주의’ 시각과 ‘진보주의’ 시각의 충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구도가 생겨나고 있음.

#### □ 대외적 환경 변화

- 2008년 7월 이후 북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확산됨.
- 특히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건강악화설은 남북한 관계의 불가 예측성을 우려하는 여론 확산으로 이어짐. 이러한 여론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강화함.
- 미국 대선 결과 진보적 성향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 2009년 이후 한-미간 다양한 외교관계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6자회담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인선작업 및 부시 행정부 동안의 대북정책 리뷰작업이 완료된 후 6자회담의 존폐 여부와 관련한 입장이 무엇일까하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
-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외교를 전개한 결과 국내정치에 서의 리더십 손실이 국제 정치에서 보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교체되었고, 일본의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를 매우 노련하게 다루고 일본 중심적 사고가 두드러진 아소다로가 집권하였음. 한편,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자국 중심의 세계관이 더욱 팽배하여 경우에 따라 주변국과의 포괄적인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외교안보 부문' 국정 평가

### 1) 전략 17-1(과제 81, 82): “북핵 폐기, 비핵·개방 3000 추진”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6자회담은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의 제도화를 확보하였고 북핵 폐기 2단계의 중반부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라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북핵 폐기를 추진한다는 과제 선정은 적절하였음.
- 또한 북핵 폐기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안보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목표도 적절하였음.
- 하지만,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다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초기 ‘북핵문제-북한문제’ 사이의 적절한 연결성(조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은 부적절하였음.
- 북한에 과감한 경제지원을 천명한 것 자체는 적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표는 실천 가능한 전략들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 비핵·개방·3000의 경우 경제정책과 다른 분야의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북핵문제와 포괄적인 북한문제를 과다하게 연결시킨 결과 남북한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국내 정치구조가 강화될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부적절하였음.

## □ 1년 과제수행 평가

- 북·미간 활발하고 다양한 양자접촉이 전개되었고 6자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6자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6자회담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내용적으로 북미간 양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음. 즉,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6자회담이 어떠한 기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적절하였음.
- 북핵 폐기를 위한 ‘국내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지획득 노력’은 전문가들로부터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북핵 폐기를 위한 보수주의적 노력만 기울였다는 세간의 비판을 고려할 때, 다소 예외적인 평가임. 이는 북핵폐기를 위한 노력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북핵폐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평가라고 판단됨.
-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보수정권이 추진하는 새로운 북핵폐기에 대한 입장 및 전략은 이해할만하지만, 그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이 없었던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비핵·개방·3000’의 경우 포괄적인 의미의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혀 추진되지 못하는 정책적 실패를 경험하였음.

## 2) 전략 17-2(과제 83, 84, 85): “한미동맹 및 주요 외교관계”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환기 및 주변 국가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시의성이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최근 10년간의 교훈을 발판으로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문제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함.
-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높이 평가함. 특히 과거 정부의 경우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변국 외교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체성과 외교수단을 분리하는 전략은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 1년 과제수행 평가

- 한미동맹 강화는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함. 특히 한미동맹 강화가 ‘전략 동맹’이라는 일정한 지향점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속성을 유지한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었음.
- 또한 이러한 전략적 목표가 추상적인 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 구상,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WEST),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함.
-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경제, 사회적 동맹 관계로 확대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한미동맹 강화가 주변국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것은 전략적으로 부족한 수행이었음. 21세기 외교환경은 제로섬이 아닌 네트워크적 관계임을 인식하였어야함.
- 오바마 당선 직후 향후 미국의 정책변화에 과다한 초점을 맞추고 미래 한미관계를 예측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였음. 미국의 정책변화 예상과 함께 우리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아젠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4강 외교를 통해 한 차례씩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체적인 신아세아 협력외교의 여건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반적으로 대일관계는 ‘양호’, 대중관계는 ‘보통’, 대러관계는 ‘양호’, 대아시아 외교는 ‘보통’의 성과를 보였음.

### 3) 전략 18 (과제 86~90):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자원외교 및 에너지외교의 강화는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및 미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한 과제 선정이었다고 평가됨.
-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개방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FTA의 다변화’라는 과제선정은 바람직하였음.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심각한 국내적 논란을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FTA 관련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책 과제 선정이 함께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적절치 못하였음.
- 현재 ODA 0.07%(OECD 평균 0.28%), PKO 활동 세계 37위로서 국가 능력에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제기여 확대를 통한 외교력의 강화는 매우 적절한 정책과제 선정이었음.
- ‘인권외교, 문화외교’ 강화는 중요한 과제 목표이지만 선정 과제내용이 빈약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어, 국제인권 이사국으로서 활동 강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과제들이었음.
-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는 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재국 정부와의 마찰 등 다소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선정이었다고 이해됨.



## □ 1년 과제수행 평가

- 에너지 외교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정책추진의 필요성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인식을 공유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대통령과 총리가 에너지외교에 적극 나섰고, 외교부가 이와 관련한 조직개편(73개 거점 공간 지정), 인원 확충(에너지 대사 임명), 공관신설(6개) 등을 통한 노력을 보인 점은 성공적인 수행으로 평가할만함.
- 하지만 에너지 외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급등, 경제 환경 악화 등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는 에너지 외교의 특성상 장기적인 시점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특징도 있겠지만 에너지외교의 목표, 비전, 전략수립의 원칙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던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되지 못하였고, 일본과의 FTA는 당분간 재개가 어려운 현실이며, 대상 다변화 이외의 무역자유화 전략은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당성으로 미국의회의 압박을 제시한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었고, 또한 미국의 경제악화 및 국내여론 변화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특히, 향후 경제적 이익, 자유화 효과, 경제외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EU와의 FTA 협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은 부적절한 수행결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2008년 동안 FTA의 다변화성과와는 무관하게 우리정부의 협상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하지만 우리의 협상 능력과 비교하여 대국민 설득능력 및 여론조성 능력은 부족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음.
- ODA와 PKO의 경우 2008년 1년 동안의 국정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의 경우 ODA/GNI 대비

0.108%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2년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음.

- PKO의 경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PKO의 군사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여론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작업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계측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였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음. 다른 외교적 사안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소 선언적인 과제로서의 성격을 보이므로 2008년 1년 국정과제 평가에 포함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경우 과제의 성격상 2008년 1년 평가가 적절치 않음.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4) 전략 19(과제 91~95): “굳건한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포괄적인 국정과제 전략에 잘 부합하고 있음. 하지만 설정된 과제 목표의 경우 과제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는 과제의 경우 과제 설정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본 과제의 경우 한미동맹의 한 동맹 파트너인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히 새로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재논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경우 과제 자체로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상위 전략(굳건한 선진안보체계)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본 과제의 경우 오히려 전략 17(한반도 평화구조)의 세부과제로 설정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과제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과제선정으로 평가됨. 다만 설정된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방위산업 관련 과제의 경우 선진국방건설이라는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2008년 말 현재 10억 달러 수준의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범정부적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다소 과대 선정된 과제로 볼 수 있음.

#### □ 1년 과제수행 평가

-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겠다는 과제의 경우, 많은 국내적 논란을 경험하였음.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을 두고 적극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전개하였지만 청와대 및 정부 외 전문가와의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많았음. 2008년은 ‘국방개혁 2020’ 중간평가의 1단계 해였지만 전면적인 보완은 2009년으로 연기된 상태임.
-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한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진보주의적 국방안보 관점의 세력과 보수주의적 국방안보 관점 세력 간의 대결처럼 보인 것은 경위야 어찌되었건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과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SCM(한미연례안보회의), SPI(안보정책구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정책 조율을 해나가고 있음.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쟁억지능력 변화 및 전쟁수행 능력 변화에 대한 가감 없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가 전제가 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는 무의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경과제 우선순위에서 매우 후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임.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군사 군축문제에 관한 정부의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 발견되었음. 결과적으로 2008년 정책과제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상위 전략과제와의 연계성도 높고 상식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과제 선정으로 평가됨.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 과제는 정책 의지와 필요성에 비해 현 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였다는 평가가 있었음.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위사업은 다른 국가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결여되었음.
- 또한 방위산업 성장이 우리 경제의 포괄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비전의 제시가 없었음.
-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설치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계획-예산-집행-평가’ 간 일련의 무기체계 획득업무 권한과 책임간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권한의 국방부 전환 및 합참과의 연계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5) 전략 20(과제 96~10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 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

- 탈근대적인 네트워크 외교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창출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과제 선정으로 평가됨. 하지만 대부분의 세부과제들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추진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인해 2008년 당해년도 평가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세부과제의 경우 외교안보 전략과제와 잘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보이고 있음. 다만 ‘선진 국가’를 목표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정권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가브랜드 사업은 외교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과제 선정으로 평가되었음.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그리고 ‘체육관련 단체의 기능 조정’ 등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이번 정부에 의한 과제선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외 문화체육생활 환경 개선 과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으며 또한 외교안보 과제들이 집중된 ‘국정지표 V. 성숙한 세계국가’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문화국가로의 발돋움’ 과제는 세부과제에 있어서 ‘문화계 인력풀 강화’ ‘문화접대비 제도 연장’ ‘한글의 세계화 촉진’ 등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지표가 많았음. 또한 주관기관과 관련하여 문화부가 주관하기에는 다양한 관련 기관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관기관 선정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 과제의 경우 매우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경향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과제였다고 평가됨.
- ‘양성평등’ 과제의 경우 정책선정의 적절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요 정책과제로 다뤄져 왔고, 세부과제 내용의 경우도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공천 여성 30% 할당’과 같이 행정부 차원에서 관철하기 어려운 과제가 선정되어 있음.

#### □ 1년 과제수행 평가

- ‘국가브랜드’ 과제의 경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넘어선 이후의 주요 국가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다른 선진국들 역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후 주요 국가과제로 ‘국가브랜드’ 작업을 추진하였다는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과제 수행 평가와 무관하게 매우 긍정적인 국정과제라는 평가를 받았음.
- ‘문화체육 생활’ 과제의 대부분의 세부과제는 추진기한이 장기적인 과제들인 관계로 연간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세부과제 명이 추상적이어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문화체육 생활’ 과제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외교적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 즉 세계국가로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정책들의 하나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인식의 변화라는 평가가 있었음.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 과제의 경우 관련 세부과제 대부분이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과제들이므로 2008년도 과제수행 평가에 부적절함이 있음. 또한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지적되었던 과제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마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평가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음.
-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의 경우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가 개선되었고, 외국인 인력 및 재외동포를 위한 출입국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기 정착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과제가 수행되었음.
- ‘양성평등’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과제 추진 시한 역시 2012년 하반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과제수행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3. 정부 및 외교안보 분야 향후 과제와 제안

#### 가. 정부 부문

##### 1)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혁

-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권 초기 다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그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수정하는 소폭의 후속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함.
-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선행되는 단계별 접근방식 필요함.
- 나라살림의 알뜰한 운영과 관련하여(과제 2)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단 정량적인 목표 수정은 불가피해 보임. 수치적인 조정을 불가피 하더라도 운영상의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예산감축 통해 확보된 예산 여력이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공공부문 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까지 고려할 것인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또한 향후 평가분석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비하여야함.
- 2009년 이후 감사의 통제적인 기능에서 감사의 지원적인 역할로 전환 된다면 무엇보다도 상당한 규모의 전문인력 요구가 예상됨.
-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무원 업무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평가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임. 향후 이와 관련한 준비가 요구됨.

## 2) 분권화/균형성장

- 2009년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각종 의견 제시가 예상됨.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의 논의를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향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권한 강화에 대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평가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이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적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광역 경제권 발전위원회’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추가 조치가 필요함.
- 낙후지역에 대한 현재의 인프라 강화시책은 비용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함.
- 2009년 이후 중부세의 수정, 분권교부세의 기한만료 등으로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문제의 핵심은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개발에 있다는 점임.
-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도입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임.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국정과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향후 추진의 범위설정, 재원지원, 인사권, 업무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 3) 법질서 및 사회 안정

- 2009년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활성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검찰관직 개방 등 검찰시스템 개선, 공정한 가석방 제도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징금납부 강제제도 도입 등의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여야간의 대립이 예상되고, 온라인상의 시민참여가 확산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부패척결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투명성 평가의 경우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패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1)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기준 강화, 2)부패 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방안, 3)로비스트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제정법률안의 검토, 4)청렴도 측정의 합리적 대안 모색과 5)정책투명성 평가의 시범적용 확대 등임.
- “신문법”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입법추진이 주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정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여론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미약한 형편임. 또한 향후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제 참여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 공배제의 취지가 어떻게 살려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과제로서 갈등관리법이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되었고, 기본법이 없는 상황임.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갈등관리법안 TF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2009년 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정하는 입법 활동이 부각될 수 있음.
- 2009년 이후 공정위의 동의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단계에서 사법단계를 배제한 것에 대한 근거 논란이 예상됨. 그리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핵심은 교섭력 차이의 시정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 4) 사회 인프라

- 2009년에도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악성루머의 확산과 악플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09년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수입품이나 쇠고기 부산물로 인한 안전성문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아동(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들에 대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적 안정성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음. 안전한 일터의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민간자체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2009년 이후 경제적 침체, 실업,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문제, 여성 폭력 등의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임.
- 2009년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한 공개, 대국민교육, 시민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요함.

## 나. 외교안보 부문

### 1) 북핵 및 남북한 관계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다자주의 + 양자주의’의 결합방식이 전개되고 있지만 오바마의 집권으로 양자주의에 대한 강화가 예상됨. 북미 양자접촉 강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우리정부의 역할 창출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기능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이후 국내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는 수면 하에 사라진 형국이지만, 2009년에는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오바마 정권 하에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논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경색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내정치적 불만이 아직까지는 정국운영에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국내정치적 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음.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우리정부가 국내정치적 비판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논의(혹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남북한 관계 경색이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를 자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비핵·개방·3000’ 정책은 기존의 어떤 대북 관여정책 보다도 과감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정책은 군사, 사회, 국제 분야 등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 긴밀한 조화를 이루어야 실천 가능함. 비핵·개방·3000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정책 전반의 조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매우 중요함.
- 2009년 이후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의 실질적 무용론을 포함할 수 있음. 현재는 검증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지만, 일정한 계기로 인해 북미간 협상 계기가 형성된다면 6자 회담의 기능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음. 현재의 북핵폐기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한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유용론’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인도적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경제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적극 연계·활용하는 이원적(two track)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 예를 들어, 2009년 북한 농업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우리측 인도적 문제를 같은 ‘인도적 문제 아젠다’로 묶어 다른 이슈로 확산(spill-over)되지 않도록 북한에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2) 한미관계

- 2008년 미완성 과제인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관련한 한미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미래비전 수립, 고위급 전략대화 등은 특정 부서의 추진 의지만으로 부족함. 관련한 행정부 각종 부처간의 인식공유 및 공동연구, 정책조율이 필요함으로 미래비전 수립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초 행정부적 차원의 T/F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이후 민주당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의 장악은 우리에게 외교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집권세력과의 외교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와의 다양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적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자산임. 국제공조체제의 복구를 목표로 설정한 입장에서 기존의 동맹 파트너들은 공조체제 복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고, 특히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가 강화될 수 있음.
- 다만, 주요 인선 등의 경우 중국 중심적인 외교정책 전개(국무부 아태 차관보, NSC 아시아 선임 국장 등)가 예상되기도 하는 바, 2009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치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지역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반도 정책 관련 변화가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우리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2009년의 경우 파급 효과가 큰 ‘북핵문제 정책 변화’ ‘2012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한미 FTA의 경우 2009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비준동의안 관련 추진 논의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3) 동아시아·신아시아 외교

-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겠다는 국정목표는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연결되어야 함. 특히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강조할 것이고,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동아시아지역협력’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혹은 두 가지 전략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함.
- 즉, 동아시아의 동맹관계와 지역협력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놓여야 한다는 담론과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 예를 들어, 안보와 경제 사이의 ‘정경분리 지역협력’, ARF 및 APEC의 제도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안 등이 제시되어야함.
- 한일 외교의 경우 기존 양국 간의 쟁점 해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로 관심이 이동하여야함. 한중 외교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공적인 외교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및 비공식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개선 및 대중국 민간외교 활용이 요구됨.
-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념 확산이 중요하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정부 홍보와 더불어 학계나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식인 집단간 교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 경제외교

- 에너지 외교의 경우 장기과제와 단기과제 간의 전략적 구분이 필요하므로 2008년 경우 과제선정의 당위성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확산에 만족하고, 2009년부터는 에너지 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전략의 추진 주체, 민관 참여자의 범위, 부처간 업무조정 등의 세부 전략수립에 노력하여야함.
- 에너지외교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함.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정권적 차원에서 밝힌 ‘green 에너지 산업’ 추진이 우리의 에너지 외교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비하여야함.
- 2009년 한-EU FTA 협상 타결이 요구됨.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이익, 자유화 효과, 경제외적인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EU와의 FTA는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한-EU FTA는 미국정부와 의회에 한미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매우 효과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2008년 하반기에 가시화된 국제적 경기침체는 우리의 FTA에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제경기 악화에 따른 FTA 추진전략의 논리를 새롭게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됨.
- 또한,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가능케 하는 만능의 선택은 아니므로 FTA 추진 전략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구조개혁은 물론 경제자유화를 지탱하는 국내 정치적 기반 강화 노력을 위한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함.

## 5) 국방 분야

- 국방개혁 2020 보완의 경우 장관 등 국방정책 책임자의 임기 및 전문성과 결부된 개혁 방향성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2009년 1단계 중간평가 및 보완 작업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없어야 함. 또한 2008년도의 경우 국방개혁의 객관적인 조건(경제상황 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경험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전제로 한 논쟁이 요구됨.
- 2009년 북핵문제 해결의 난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재발 등과 관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 전환’ 과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들어선 2009년 이후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포지션이 무엇인지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함. 만약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2012년 전환 합의라는 애초의 입장에 번복 가능성이 없다면 전환 시기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의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남북한 간 군사신뢰 구축’ 과제와 관련하여 2008년 말 이후 북한의 강경 발언의 배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2009년 북한의 전략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군을 앞세운 북한 선군정치 특징을 고려할 때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 전반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함.
- ‘군사시절’ 조정과 관련한 과제의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과제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부족함. 따라서 2009년 이후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술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제도적으로 지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관련하여 ‘국방부-지자체-민간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 2009년 이후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6) 국제 기여 외교

- 2009년도에는 2010년 목표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 특히 현재 계류 중인 ‘대외원조기본법’과 ‘공적 개발원조기본법’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함.
- ODA 외교는 우리 현실적 국력과 향후 국가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분야임.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각 행정부처에 걸쳐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ODA 사업의 중복과 무분별한 추진이 지적되었음.
- 2008년 존폐 논란이 있었던 ‘국제협력개발위원회’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며 ODA 업무의 조정 및 총괄이 가능토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PKO 활동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 2009년에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전제로 ‘PKO 참여법’(가칭) 제정이 성사되어야만 구체적인 기여외교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08년의 경우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으므로 우리의 보편적인 외교 목표의 틀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적합한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는 일이 시급함.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함.
- ‘외국인의 입국제도 개선’과 ‘국내 거주 외국인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지고 실제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에 있음. 따라서 2009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함.



## VI. 맺음말



## VI. 맺음말

### 1. 교육 및 과학정책 분야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에 비해서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일반 국민들은 5대 국정지표 중“인재대국”을 정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음.
-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인재대국”을 “능동적 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함.
-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기조에 대해 별도의 질문을 했을 때도 59.8%가 바람직한 편이라고 응답함.
- 그러나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책기조와 맞는 방향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6.7%만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인재대국’의 국정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교육분야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임.
- 일반인들은 막연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엘리트 교육에 치중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편임.
- 전문가들은 정책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정비전과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2009년 이후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은 올바른 방향임.
  - ② 교원평가제 조기시행 : 미래지향적 교육의 선결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변화임.
  -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업 : 아무리 좋은 정책목표나 과제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추진의 탄력을 받기 어려움.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여론형성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 ④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 강화 :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은 학교자율에서 시작됨.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회계’의 자율보다 ‘학사’의 자율이 더욱 중요함.
  - 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2009년에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출연연 통폐합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교 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두어야 함.
  - ⑥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상근 전문위원제 도입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⑦ 녹색기술 : 최근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이 사용자에게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2009년 이후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정책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소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시가 필요함.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2009년 이후 향후 과제에서 전반적인 국가발전 프로그램과 국가 R&D 전략 사이의 세밀한 연결성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2. 경제성장 및 복지정책 분야

- 2기 내각은 대통령과 여론보다는 국민과 역사를 생각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 불황이나 경제위기 때마다 써왔던 정책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총체적이기 때문임.
  - 따라서 위기대책 또한 보다 실효성이 높고 유연하며 또 일관성이 있어야 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주체들 앞에 놓인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임. 그래야 이들 경제주체들의 투자, 고용, 그리고 소비라는 행위가 예측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정책이 유도했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
- 실효성이 높고 시의적절한 정책조합들을 발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함.
-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정책조합들을 검토해 보는 특단의 노력 필요
  - 재정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것도 그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음. 재정확대라는 대세에 편승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단호함도 필요함. 경쟁력이 없는 시장에서의 낙오자까지 지원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임.
-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함.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윈-윈(win-win) 정책과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구인 효과(crowd-in effect) 극대화 정책들을 발굴

-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짜야함.

□ 시행된 정책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관성 유지에 힘써야함.

- 지금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4년 후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선택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인내가 필요

- 한 순간 여론에 휘둘려 접어버렸던 정책들이 훗날 그 진가가 알려져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

-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야함도 이 때문

- 필요하다고 확신이 선 공공부문개혁은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위기대처 노력은 새 내각의 노력만으로는 부족

- 본질이 외면된 채 껍데기만 판을 치는 정치현장과 국민의식 하에서는 그 어떤 위기대책도 소용없기 때문

- 우선, 정치권은 당장이라도 각종 슬로건 정치를 중단

- 언론은 감각적 헤드라인을 뽑으려 고민하는 대신, 각종 법안이나 정책안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

- 우리 국민 또한 쉽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포장된 단어하나에 매몰되어 정책의 참뜻을 이해 못하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함.

- 이처럼 슬로건 정치와 포퓰리즘 망령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짐.

### 3. 정부 및 외교안보정책 분야

#### □ 공공부문 개혁과 2009년 국정과제

- 주지하는바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분위기에서 출범하였음.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임. 특히 공공부문 개혁내용의 상당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해 당사자의 저항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경제위기는 역설적이게도 공공부문 개혁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09년 이후 상대적으로 경영개선이 용이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개혁의 모범 사례를 보이는 전략이 필요함.
- ‘지방분권화’ 및 7‘대광역경제권’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개별 지역간 참여한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는 관계로 과제 추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어느 과제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분권화의 경우 지방정부 스스로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함. 또한 공공부문평가제도 개선 및 감사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되어야함.
- 식품환경 개선 및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관련 과제들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과제 수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08년의 경우 흉악범이 빈번히 출현하였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안전망이 실종된 듯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정책개선이 시급함. 일상생활의 안전이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원리임.

#### □ 외교안보 정책 개선과 2009년 국정과제

-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2009년 이후 우리의 대외관계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화 요인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의 인선,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대적인 진보정권의

출현이라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임.

-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게 외교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갈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함.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반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또한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오바마 정부이지만, 오히려 오바마 정부 출범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함.
- 남북관계와 관련 향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북핵 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북핵문제가 정제되어 있는 와중에도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적극 보여주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도 하락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멈췄다는 점을 상기하여,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오는 4월 런던 G-20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이외 ODA 외교, PKO 파병, 인권외교, 각종 국제사회 기여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일관된 입장유지가 중요하며, 우리의 역할을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정책을 병행하여야함.
- 한미 FTA의 경우 2009년을 넘어서면서 미국 내 경제상황과 관련 여론이 워낙 부정적인 상황이므로 전략적으로 다소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여야함.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
- 곽태원 외,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6.
- 권순우, “글로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 CEO Information 64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선빈 외,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 삼성경제연구소, 2007.
- 김성한, 『북핵, 한미동맹, 평화체제의 삼각관계와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2007.
-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대한민국정부(2008),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프레스, 1994.
-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5.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바른 한국의 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 박세일, 『대한민국 국가전략』, 21세기북스, 2008.
- 박인휘 외, 『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교훈과 과제』,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2008.
- 배규한, 정구현, 이달곤, 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나남출판, 1994.
- 세종연구소,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세종연구소, 2008.
- 송원호, 이인구, 오승환,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경기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안종범, 『개방화세계화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 안종범 외, 『재정포플리즘과 재정개혁』,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2008.11
- 옥동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대책”, 국가경영전략 심포지엄, 2005.
- 이상현, 송대성, 『한미동맹의 변환: 안보차원의 과제와 대책』, 세종연구소, 2008.

- 장훈, 김병국, 정진영,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동아시아연구원, 2006.
- 정책기획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과 전략』, 비봉출판사, 2007.
- 중소기업연구원, 「구조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06.
- 하영선·김상배 편, 『21세기 세계 정치의 변환: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200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입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타조, 2002.
- 황상연, “서브프라임 사태: 현황과 전망,”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7.
- 현대경제연구원(2004), 「참여정부 1년의 경제 성과와 과제」